

#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1995. 12.

오승렬(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최수영(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박순성(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서 문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경제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과 완충기 동안의 조정정책 등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사회일탈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제 체제안정을 위해서라도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한편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남북경제관계의 향후 전개방향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북경협 방안은 북한의 경제개혁 가능성보다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연계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인 남북경협 방안은 북한의 수용가능성 및 실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개혁 가능성 및 개혁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경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본 연구가 우리의 대북 경제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995. 1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 요 약

본 연구는 북한 경제난의 성격 및 원인과 현단계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경제개혁 과정을 전망한 후, 남북한 경제관계 추이에 비추어 실천 가능한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북한의 경제개혁 단계 별로 제시한 것이다.

## 1. 북한 경제난의 성격 및 원인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은 식량 및 소비재, 생산원자재, 투자자원, 기술력과 인적자원 등 경제제반에 있어서의 부족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누적되어 온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며, 1990년대 국제환경 변화 및 농업생산 부진은 산업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북한경제의 부족현상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권 변혁과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긴장고조 등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고 있다. 즉, 북한경제의 결핍현상을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부족현상은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기간 존재해 온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결합이 누적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 경제난의 본질은 광범위한 물자 부족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체제이념에 따른 발전전략과 중앙계획경제 운영상 나타나는 비효율성,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산업불균형 확대 재생산기제, 대외경제관계의 결합 등의 경제체제 결합에 기인하였다.

## 2.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성과 변화전망

북한은 근래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및 대외 무역 분권화 등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완충기 동안 우선순위를 농업과 경공업에 두겠다는 대내경제정책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투자구조 및 경제운영체제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틀 속에서 관리방법을 개선해 왔다.

최근 북한의 정책변화 방향은 ① 임금인상 및 장려금 제도와 경제단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② 나진·선봉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집중, ③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 분권화 등 수출 인센티브의 제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한 거시경제 모형을 사용하여 현단계 경제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

다. 분석 결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이 근래에 추진하는 체제를 속에서의 노동 인센티브 개선이나 무역분권화 등 수출촉진정책, 그리고 나진·선봉지역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다같이 부족현상이나 국민 총생산 감소 추세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정책의 한계성과 수재로 인해 북한은 금년 겨울부터 위기적 경제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김정일 정권은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 노선은 ① 경제계획기구 및 인센티브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경제개발 사업 추진, ② 부분적 시장기제의 도입 및 확대와 경제단위의 자율권 신장, ③ 전면적인 시장화 및 다양한 생산수단 소유제의 수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은 금년 겨울부터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앞에서 논의된 3가지 정책노선 중 점차 현재의 ① 노선으로부터 ② 단계로의 노선전환을 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정일 세습정권의 정치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정책이 ② 단계에서 ③ 단계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부분적으로 시장기구 도입을 통해 경제운용체계 개선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세습체제의 한계성과 기득 관료 및

군부의 반발로 인해 정책변화는 좁은 영역에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과정은 개혁초기부터 공개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표방·선전해 온 중국의 경우와 판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 3. 남북한 경제관계 추이와 과제

199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남북교역 및 경제인교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1993년 봄부터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경색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 들어 북한의 핵문제가 대북 경수로 지원을 고리로 풀려 나감에 따라 물자교류는 활력을 되찾았으며, 우리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1994.11.8)를 계기로 남한 기업인들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의 경우, 남북교역의 총거래액이 북한 총무역액(21.1억 달러)의 9.2%에, 특히 남한으로의 반입이 북한 수출액의 21.0%에 달한다.

그러나 남북 물자교류는 ①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인한 수입역량의 부족, ② 북한의 수출상품 생산능력 부족, ③ 간접교역 및 수송체계 미흡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 잠재력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북한이 정치적 이유로 인해 남한 상품의 반입 및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도 예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단계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 경제관계는 정치·군사·안보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북한이 남북 경제교류의 제도화 필요성을 자각하고 기본합의서 실천에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방향은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하여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남한의 흡수통일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며,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4. 남북 경제교류·협력 추진방안

북한체제의 순조로운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경협 방안은 북한이 현재의 계획경제 틀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경제정책 변화를 견지하는 단계와 부분적으로 시장기구를 도입하고 기업자율권 확대 및 농업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단계,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장지향적 개혁정책과 소유제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계획기구 및 인센티브체계의 개선과 나진·선봉지역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현단계에서는 간접교역 등 기존의 남북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남북한간 신뢰회복에 기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경협 제도화 및 시장지향적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제교류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의 남북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주민의 거부감 배제 등 교육효과를 거두는 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부분적인 시장기구 도입 및 기업자율권 확대와 농업 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북한이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남한기업 및 정부의 투자, 그리고 남북한 합의 하에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전면적인 시장기구 도입과 소유제도의 다양화 등 본격적인 경제개혁 단계에 접어들면, 남북 경제관계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개혁과정에서 나타날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북한 경제체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남한은 대북 투자와 경제지원을 통해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북한이 개혁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 부분적 가격자유화 및 기업자율권 확대, 소규모 개인기업 허용, 농가책임생산제의 실험적 도입, 자유경제무역

지대와 내부경제의 연계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남북경제 교류·협력은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들의 적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재 및 소비재 시장의 형성 허용, 북한화폐 평가절하, 농업과 경공업위주의 투자구조 지속 등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제2단계에서 제3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5. 정책적 고려사항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이 개혁·개방에 착수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꾸준히 남북간 철도·도로의 연결 및 해로 개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사업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남북공동조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협력 사업의 정확한 수행과 남한산업에 대한 유효 수요 증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대북 경제지원의 경우 현물차관 형식이 바람직하다.

넷째, 남북경제관계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북한의 대남반입물품에 대한 특별청산계정 및 무이자 대월차

금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협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근로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제3국에서의 북한 인력 기술교육 체계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북 경제협력 실행 과정에서는 경제교류·협력 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알선을 위해 서울·평양에 「경제대표부」 교환설치를 타결하는 한편, 「남북통상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남북공동어로협정」, 「협력사업 원자재 공급협정」 등 각종 세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제 I 장 서론 .....	1
제 II 장 북한 경제난의 성격 및 원인 .....	7
1. 경제난의 성격 .....	7
가. 식량을 포함한 생활필수품 및 소비재 공급부족 ..	12
나. 생산원자재 및 중간재와 에너지 공급부족 .....	15
다. 투자재원 부족 .....	18
라. 산업시설 및 기술의 낙후성과 인적자원 부족 ...	21
2. 경제난의 원인 .....	22
가. 주체사상과 자급적 경제 추구 .....	23
나. 경제체제 운영기제의 비효율성 .....	26
다. 부족현상의 확대 재생산 기제 .....	29
라. 대외경제관계의 비효율성 .....	30
제 III 장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성과 변화전망 .....	32
1. 경제정책 동향 .....	32
2. 현단계 경제정책의 한계성 .....	38
3. 경제정책 변화전망 .....	50

제Ⅳ장 남북한 경제관계 추이와 과제 .....	57
1. 남북한 경제관계의 전개 .....	57
2. 남북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현황 .....	64
3. 남북 경제관계의 과제 .....	72
제Ⅴ장 남북 경제교류·협력 추진방안 .....	79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기본구도 .....	79
2. 계획기구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단계 .....	84
가. 교역절차 간소화 및 제도적 장치 보완 .....	85
나.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	88
3. 시장기구의 부분적 도입 단계 .....	89
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직접투자 허용 및 확대 .....	90
나. 남북한 공동사업 추진 .....	91
4. 전면적 경제개혁 단계 .....	93
가. 공업부문 .....	96
나. 농·수산업부문 .....	103
다. 생산기반시설 부문 .....	106
제Ⅵ장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	109
참 고 문 헌 .....	136

## 표 목차

<표 2-1> 북한 GNP의 연평균 성장률 추이 .....	7
<표 2-2> 북한의 주요 경제총량 지표 .....	8
<표 2-3> 북한의 주요 산업 생산 추이 .....	8
<표 2-4> 북한의 투자구조 .....	24
<표 3-1>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관련 법령 정비 현황 ....	37
<표 3-2>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지표 변화방향 .....	44
<그림-1> 북한경제의 정책 파급효과 .....	50
<표 4-1> 남북한 물자교류 승인현황(1988.10~1995.10) .	65
<표 4-2> 남북한 물자교류 통관현황(1988.10~1995.9) ...	66
<표 5-1> 북한 제조업 부문별 중간투입율과 중간수요율 .....	98
<표 5-2> 북한의 산업 애로분야에 대한 주요 중간재 ..	100
<표 5-3> 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지수 .....	102
<표 5-4> 북한 농·어업 직접투입계수 .....	104

## 부록 목차

<부록 1> 비교정태분석 결과 도출의 예 .....	116
<부록 2> 나진·선봉지역 외국인투자 유치희망 프로젝트 리스트 .....	117
<부록 3> UNIDO에 제출한 북한 합작투자 유치 희망사업 내역 .....	124
<부록 4-1> 1990년도 북한의 산업별 생산액 추계 .....	129
<부록 4-2> 북한산업의 직접투입계수 .....	130
<부록 4-3> 북한산업의 생산유발계수 .....	132
<부록 4-4> 북한의 산업연관표(중간수요 및 중간투입)	134

## 제 I 장 서론

북한경제는 체제결함 및 국제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침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 및 소비재, 에너지를 포함한 중간생산재, 투자재원, 인력자원 부족 정도는 한계적 상황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서도 경제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하에 근래에 북한은 나진·선봉지역 개방 및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정비와 무역 및 생산인센티브제도의 개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다. 경제체제 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경제정책 변화의 미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에 버금가는 수준의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김정일 세습정권의 정치적·이념적 제약요인과 기득계층의 현체제 선호경향, 그리고 북한당국이 범하고 있는 경제난 원인분석에 있어서의 오류를 들 수 있다.<sup>1)</sup> 우선 김정일 세습정권은

---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 노선은 ① 경제계획기구 및 인센티브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경제개발 사업 추진, ② 부분적 시장기제의 도입 및 확대와 경제단위의 자율권 신장, ③ 전반적인 시장화 및 다양한 생산수단 소유제의 수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Ⅲ장 3절 참

김일성 유일사상에 정통성의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김일성 노선의 무오류성을 입증하고 견지하는 것은 정권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의 정책적 오류를 분석·비판함으로써 과감한 개혁노선을 정당화시킨 것과 같은 방식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북한의 당·군·정 및 경제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 세력의 현체제 선호 경향은 북한체제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북한은 이념적 견고성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곧바로 물질적 이득 및 사회적 위상과 결부시킴으로써 지배계층과 일반주민을 차별화해 왔기 때문에 체제관리 계층의 현상유지 성향이 매우 강하며, 이는 북한의 정보차단 체제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난 원인분석에 있어서 지도층의 오류와 대안 제시 능력의 부족 역시 북한의 체제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 북한 지도층은 경제난이 구소련 및 동구권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시

---

조).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개혁정책으로서 전반적인 시장화 및 생산수단 소유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시장기제의 도입 및 경제단위 자율권 신장 등의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를 북한 경제개혁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개혁정책은 국제 가격구조와 국내 가격구조의 연계, 생산단위에 대한 대외 무역권 부여 등 대외개방정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장지향적 개혁, 그리고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와의 마찰 등 주위환경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왔으며, 최근에는 수재로 인한 피해규모를 대내외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경제정책 실패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와는 달리 체제개선을 위한 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 정책변화의 한계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진·선봉지역의 개방 등 체제 내에서의 정책변화에 의해서도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왔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북한당국은 시장기구와 계획기구의 결합이나 기업의 자율권 확대 및 국내경제와 대외경제의 연계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체제 내에서의 정책변화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주민생활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김정일 정권은 정권승계의 능력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조만간 체제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을 채택해야 할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언제 경제개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앞에서 설명한 북한의 개혁 저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과 무역권

분권화 및 부분적인 인센티브체계 개선 정책의 미흡한 성과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도 시장기구의 도입 등 경제체제 개선방안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경제외적인 요인들이 이의 구체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배층은 특수한 남북한 관계를 활용하여 정치·사회적 긴장상태와 체제수호를 위한 이념적 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개혁정책의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현단계 경제정책의 한계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결국 보다 전향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아 시장기구의 도입과 소유제도의 다양화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up>2)</sup>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남한은 남북한 당국자간 협의에 의한 경제교류 및 협력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은 경제교류·협력의 제도화보다는 민간기업과의 선별적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1995.1~9 동안 남북한간 총교역액은 이미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여 1994년도 총교역

---

2)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혁 과정과 남북 경제관계 발전의 연관성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북한체제가 붕괴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이 제한적인 경제정책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 자생력을 가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본 연구 제Ⅲ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논의하지 않는다.

액을 초과하고 있다. 1994년만 보더라도 남한의 상품반입규모는 북한 수출총액의 21%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남북교역이 북한의 주요 외화소득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래의 추세로 미루어 보아, 남북한간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편 당국간 합의에 의한 경제교류·협력의 제도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체제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는 한 북한의 사회주의계획경제 특성상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범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남한의 대북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관건은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제약요인 극복을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순조로운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면, 이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민족경제 공동번영 구현 및 평화적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아직 제한된 영역에 머물고 있으므로,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노선 변화를 감안하여 시장

지향적 개혁을 앞당기고 개혁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북한경제의 적응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대북경제지원 및 남북 경협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경제교류·협력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직·간접 교역, 투자, 기술협력, 공동사업 추진, 경제지원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은 다시 산업분야별로 각각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는 데, 북한의 개혁·개방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교류·협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성격 및 소요 자원 조달 방안과 관련,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경제난의 성격과 원인을 분석한 다음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성 및 변화방향을 분석·전망하고, 남북한 경제관계 변화과정을 살펴볼 것이며, 단계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한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II장 북한 경제난의 성격 및 원인

### 1. 경제난의 성격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은 식량 및 소비재, 생산원자재, 투자자원, 기술력과 인적자원 등 경제제반에 있어서의 부족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누적되어 온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며, 1990년대 국제환경 변화 및 농업생산 부진은 산업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표 2-1> 북한 GNP의 연평균 성장률 추이

(단위: %)

1954 ~ 56	1957 ~ 61	1961 ~ 70	1971 ~ 75	1976 ~ 80	1981 ~ 85	1986 ~ 89	1990	1991	1992	1993	1994
30.1	20.9	7.5	10.4	4.1	4.3	2.4	-3.7	-5.2	-7.6	-4.3	-1.7

출처: 1954~1989년 성장률: I. Jeffries,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s to the Market: A Guide* (London: Routledge Publishing Company, 1993), p. 197; 1990~1994년 성장률: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 결과」 (서울: 한국은행, 각년도).

&lt;표 2-2&gt; 북한의 주요 경제총량 지표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경상 GNP(억달러)	240	231	229	211	205	212
1인당 GNP(달러)	1,123	1,064	1,038	943	904	923
GNP 성장률(%)	2.4	-3.7	-5.2	-7.6	-4.3	-1.7
무역규모(억달러)	45.9	47.8	27.2	26.6	26.4	21.1
수출	16.9	18.6	10.1	10.2	10.2	8.4
수입	29.0	29.2	17.1	16.4	16.2	12.7
외채(억달러)	67.8	78.6	92.8	97.2	103.2	106.6

출처: 1990년까지는 통일원, 1991년 이후는 한국은행의 추정치임.

주: 통일원의 1989년 이후 북한 GNP 및 1인당 GNP 수치는 UN의 국민계정체계에 따른 추정치임.

&lt;표 2-3&gt; 북한의 주요 산업 생산 추이

	단위	1990	1991	1992	1993	1994
전력공급	억KWh	277.4	263	247	221	231.3
곡물생산	만ton	481.1	442.7	426.8	388.4	412.5
강철생산	만ton	336	316.8	179.3	186	172.8
시멘트생산	만ton	613	516.9	474.7	398	433.0
비료생산	만ton	158.6	143.5	138.5	160.9	131.8
석탄생산	만ton	3,315	3,100	2,920	2,710	2,540
직물류생산	억M <sup>2</sup>	2.0	2.1	1.7	1.9	1.9
원유수입	만ton	252	189	152	136	91

출처: 1990년은 통일원, 1991~94년은 한국은행 추정치임.

북한경제의 부족현상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권 변혁과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긴장고조 등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고 있다. 즉, 북한경제의 결핍현상을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부족현상은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기간 존재해 온 사회주의 '흡입형 경제(suction economy)'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3)</sup>

북한은 1957~1961년 동안 계획되었던 5개년계획의 주요목표를 앞당겨 1960년에 완성했다는 판단하에 1961년에는 제1차 7개년계획에 착수하였으나, 이미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5개년계획기간 중에 잉태되고 있었다. 5개년계획의 조기달성은 오로지 사회주의 동맹국가들로부터의 원조와 동원체제의 유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주로 주요부분의 양적 목표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이

---

3)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 J. Kornai는 중앙계획형 경제하에서의 수요·공급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 및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의 개념을 더욱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압력형 경제(pressure economy)'와 '흡입형 경제(suction economy)'로 확대하였다. Kornai에 의하면, 한 경제체제하에서의 수요·공급 상황은 장기간에 걸친 의사결정 과정과 시행과정의 상호작용하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압력형 경제에서는 구매자 시장이 보편적이며, 흡입형 경제에서는 판매자 시장이 보편적인 상황이다. J. Kornai, *Anti-Equilibrium*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71), p. 226 참조.

미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사회주의 동맹국으로부터의 원조는 현격히 감소하였으며, 실행되었던 원조 역시 북한관련부문의 원자재 공급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중화학 공업용 설비 위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북한은 생산원자재 역시 주로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했기 때문에 동맹국으로부터의 원조감소는 북한의 전산업분야에 심각한 불균형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50년대 북한의 농업집단화 역시 인센티브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농업부문의 집단화가 일단락된 직후인 1958년 9월에 이미 대중의 자발적 노동참여를 강조하는 '천리마 운동'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1960대 초 북한경제가 이미 심각한 부족현상에 봉착하고 있었음은 '청산리 방안'과 '대안의 사업체제'의 확대노력에서 엿볼 수 있다.<sup>4)</sup> 청산리 방안이나 대안의 사업체제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당간부가 직접 농민 혹은 근로자와 접촉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생산재를 적시에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농업 및 산업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당간부와 노동자의 혁명적 자발성을 함양한다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불균형은 1960년대 군수산업 및 중공업 위주의

---

4) 김일성은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960년과 1961년에 각각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제'를 제안하였다.

경제정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1967~1971년 동안은 북한자체 발표에 따르더라도 국방비가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처했다. 북한은 점차 악화되어가는 산업간의 불균형과 부족현상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중공업 및 군수산업부문을 조정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점차 기념비적 산업설비 및 조형물 건축에 재정지출 및 물자공급의 중점을 두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여타부문의 부족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와 같은 정책노선을 추구한 결과 북한은 제1차 7개년계획을 3년 연장하여 1970년에야 마무리지을 수 있었으며, 이후에 추진된 6개년계획(1971~76), 제2차 7개년계획(1978~84), 제3차 7개년계획(1987~93) 종료 후에는 각각 1년, 2년, 3년의 조정기를 두었다. 이는 곧 계획기간 동안의 경제정책이 심각한 산업불균형 및 부족현상을 유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공업지향적인 정책의 결과로 특히 소비재부문은 절대적인 부족현상에 시달려 왔으나, 북한은 소비재부문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등은 지방이나 기업의 내부 유휴자원을 동원하여 소비재 결핍을 보완하려는 소극적 정책이었을 뿐이며, 중앙정부는 결코 소비재부문의 확충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제공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sup>5)</sup>

요컨대 북한경제체제는 일찍부터 소비에트형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부족증후를 보여왔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그 정도가 점차 악화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첨예하게 대두된 북한경제의 부족현상은 국제환경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북한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흡입형 경제'의 제반현상이 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즉 북한경제의 부족현상은 체제 및 정책적 요인들이 필연적으로 초래한 내생적 현상인 것이다.<sup>6)</sup> 단지 구소련 및 동구권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는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시켰을 뿐이다. 북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가. 식량을 포함한 생활필수품 및 소비재 공급부족

근래에 북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식량부족과 생활필수품 등 소비재 부족을 들 수 있다. 1990년

- 
- 5) 제도적 변화란 생산, 가격, 판매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 분권화와 시장기구에 의한 소비재의 배분 등 1960년대 이후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개혁지향적 정책채택을 의미한다.
  - 6) 물론 1980년대 말 이후 북한경제의 결핍이 가속화된 것은 구소련 및 동구체제의 변혁과 중국의 시장지향적 경제개혁 등 국제환경적 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것이나, 이 역시 북한경제의 체제 및 정책적 특성상 나타나는 적응력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에 들어 북한은 냉해 등 기후적 요인, 비료·농약 등 농업용 공업제품의 생산 부진, 인센티브체계의 문제점을 포함한 체제 운영기계의 결함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곡물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sup>

특히 1995년 6월 그동안 접촉 및 대화를 꺼려오던 남한으로부터 15만 톤의 쌀을 무상 지원받는데 동의했으며, 다시 7월과 9월에는 일본으로부터 각각 30만 톤과 20만 톤의 쌀을 지원받기로 한 것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는 수재로 인해 북한 전체 곡물수요량의 절반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8)</sup>

더욱이 1994년도에는 그동안 북한의 주요 곡물수입원이던 중국 동북3성(흑룡강, 길림, 요녕)의 곡물생산량이 열악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2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곡물수입 역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9)</sup> 중국측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 
- 7) 북한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국 동북3성의 경우 1990~93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곡물생산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난이 단순히 기후조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 8) 북한의 구조적 식량부족량은 연간 200만 톤으로 추정되는 바, 수재로 인해 1995년도 부족량은 전체수요의 약 절반인 350만 톤 이상으로 예상된다.
- 9) 중국해관통계에 나타난 북한의 1994년도(1~11월) 대중국 곡물(HS

우대해 오던 평양에 대해서도 1995년 5월부터 주민 1인당 곡물배급량을 기존배급량의 절반가량으로 감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식량사정에 더해, 북한경제는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공업소비재의 경우에도 절대적인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측이 자체발표한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의 실적을 보더라도 계획기간 동안 전체공업생산 증가목표는 1.9배였으나, 실적은 1.5배로 평가되었으며, 소비재 위주의 지방공업의 경우 계획목표는 2.5배였으나, 실적은 1.7배에 그쳐 소비재의 부족난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소비재 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합성수지 생산의 경우 당초 계획목표 50만 톤에 비해 실적은 9.2만 톤에 그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sup>10)</sup>

북한의 소비재 부족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는 암

---

code 10)수입량은 1993년도(1~12월)의 9,768만 달러 수준에서 대폭 감소한 2,374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향후 식량자급정책의 일환으로 곡물의 대외수출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중국 중앙TV 보도, 1995.7.12) 이후에도 북한의 대중국 곡물수입량은 크게 증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10) 이와 같은 북한발표 통계치는 당연히 '허위보고'(imaginative reporting) 혹은 기업의 실적조작 동기(incentives to doctor plan fulfilment report) [Jan Winiecki, *The Distorted World of Soviet-Type Economie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8)] 등에 의해 실제상황보다 과장되었을 것이나, 관찰대상의 상대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용되었다.

거래 행위의 만연을 들 수 있다. 공식적 상업망을 통한 소비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암거래를 통해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暗市場의 인플레이션 현상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암거래 증가에 따라 화폐유통속도 및 잉여화폐(monetary overhang)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물자부족현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은닉성 통화팽창(hidden inflation)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평균임금을 43.4% 인상했으며(1992.3), 기존화폐를 새화폐와 1:1로 교환했으나(1992.7), 전반적인 부족현상의 악화로 인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따라서 불법수단을 통해 계획부문의 물자가 암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공식적 상업망의 소비재 부족현상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 놓여있다.

#### 나. 생산원자재 및 중간재와 에너지 공급부족

북한은 식량과 기타 소비재의 부족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생산원자재의 공급 역시 심각한 부족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자체 평가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적을 보더라도 전력, 석탄,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등 에너

11) 「내외통신」, 주간판 제787호, 1992.3.19; 주간판 제804호, 1992.7.16.

지 및 주요 생산원자재 부문은 각각 계획목표의 67.6%, 89.3%, 87.5%, 54.5%, 77.7%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을 뿐이다.<sup>12)</sup> 물론 이와 같은 북한의 발표치 역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 생산량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전력난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 투자재원부족으로 인한 수력발전시설 및 송·배전설비 낙후와 시설확장의 한계성,<sup>13)</sup> 채탄설비 낙후 및 기존탄광의 자원고갈로 인한 화력발전용 석탄의 공급부족 및 원유도입 감소 등으로 설명된다.<sup>14)</sup> 제조업 가동률 저하와 석탄 및 시멘트 원료 등 광업부문의 생산량 감소, 그리고 외화부족으로 인한 산업용 원자재 수입량 감소 등은 북한의 공업용 중간재 부족현상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다.<sup>15)</sup>

12)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서울: 통일원, 1994).

13) 일반적으로 중앙계획형 사회주의국가의 단위 GDP당 에너지 사용 강도는 시장경제국가의 2.5~3배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J. Winiecki, *The Distorted World of Soviet-Type Economies*, p. 7, Table 1.1).

14) 북한의 발전소 건설실적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발전시설 설비는 대략 수력 66%, 화력 34%로 구성되어 있다.

15) 이와 같은 공업용 중간재 부족현상을 보여주는 예로서는 1987년에 착공된 남포의 '12월 화력발전소'가 착공 7년만인 1994년에야 제1호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었다던가, 북한이 김정일의 치적으로 선전하는 많은 건설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완성이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의한 몰자 및 설비 동원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역설적인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의해 프로젝트건설이 완성된 예로서

대체로 지역별 자급자족 체제가 갖추어져 있던 중국의 경우, 1975~77년 동안, 에너지 및 운송수단 부족 등으로 인해 제조업 설비의 20~30%가 가동되지 못했다는 보고를 고려해 보면,<sup>16)</sup> 북한과 같이 원유 및 코크스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對外依存도가 높으며 지역경제 自立도가 낮은 경우, 생산원자재 및 중간재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40~5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수재의 여파 및 에너지 부족과 채탄량 감소의 악순환은 산업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오랫동안 가동하지 못했던 생산설비는 이미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북한의 산업생산 능력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광물성 연료(원유 및 관련제품, 코크스탄)와 곡물의 수입을 위해서는 북한자체에서도 부족한 철강 및 석탄과 시멘트 등 주요 생산원자재를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생산원자재 부족정도가 더욱 심각해져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

는 서해갑문공사,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건설,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설비개조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평양출판사 편, 「김정일지도자 제3부」 (평양: 평양출판사, 1994).

16) E. J. Perry and C. Won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Causes, Content, and Consequenc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 3.

1992~94년 동안 철강·석탄·시멘트 3품목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총액 중 평균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입총액 중 원유·코크스탄·곡물은 평균 50%를 상회하고 있다.<sup>17)</sup>

#### 다. 투자재원 부족

북한은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인한 병목현상 및 산업간 불균형 해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형편이다. 북한경제의 막대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재정과 국내저축, 혹은 수출증대나 외자유치를 통한 재원확보가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 어느 측면도 낙관적이지 못하다.

북한의 정부예산은 침체해 있는 북한 경제규모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더 이상 증액이 불가능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1994년도 한국은행의 북한 GNP 추정치를 근거로 하여 판단한다면, 북한의 중앙정부 예산은 이미 GNP의 89%에 이르러, 더 이상 정부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은 힘든 형편이다. 북한의 자체 발표치를 보더라도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1994년 북한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17)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연감 1993」(북경: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1994); 「해관통계」(북경: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각호).

2.4%에 그쳐 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투자재원 마련의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한편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중공업 및 군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산업설비 낙후로 인해 기존의 산업설비 유지 및 보수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더러 군산복합체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 관료층이 획기적인 투자지출 구조 변화에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재 공급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건설공기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정책상의 특징으로 인해 한정된 투자재원마저 투자효율성보다는 정치적으로 선택된 중점항목에 집중투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체산업의 평균적인 투자재원 부족정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재정 확대의 대안으로서 국내저축 증대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북한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우선 북한주민은 식량 및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암거래를 통한 구매를 위해 현금보유를 선호하며, 은닉성 통화팽창 정도에 비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연리 3~4% 수준) 금융기관에 대한 저축률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sup>18)</sup> 한편 생산단위 역시 높은

18) 일반적으로 결핍현상을 보이는 중앙계획형 경제에서는 주민들의 좌절된 소비행위가 강제저축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나, 북한의 경우 식량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소비재 역시 암시장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현금보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생산목표와 가동률 저하로 인해 재투자를 위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한 형편이며, 원부자재 부족현상이 극심한 현상에서 재투자보다는 유동성 재원의 확보를 선호하는 형편이다.

이에 더해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는 대상국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고, 아직도 많은 부분이 쌍무적 바터교역 형태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의 대부분이 1차산업제품 및 초보적인 가공을 거친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수출의 공급탄성이 매우 낮다.<sup>19)</sup> 이와 같은 북한 무역구조의 낙후성은 북한상품의 교역조건을 불리하게 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재원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sup>20)</sup> 한편 북한은 수출부진과 누적외채에 대한 이자부담 증가로 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방채권단에 의한 '채무불이행 선언'이 아직 해제되지 않고 있어서 해외차관에 의한 투자재원 확보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

19) 1994년 10대 교역국과의 교역이 북한 총교역액의 84.6%를 차지함으로써, 1993년의 76.4%에 비해 무역집중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특히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CIS) 등 3국과의 교역액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수출상품 중 광산물 및 비철금속류와 수산물 등 제1차산업제품 및 초보적 수준의 방직제품 비중이 각각 47.1%, 21.4%에 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4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5).

20) 통일원 및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북한의 1991~94년 동안 무역액은 각각 27.2억 달러, 26.6억 달러, 26.4억 달러, 21.1억 달러이다. 통일원,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각년판);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각년호).

## 라. 산업시설 및 기술의 낙후성과 인적자원 부족

북한 주요산업설비의 대부분은 1950~60년 동안 구소련 및 동구와 중국으로부터의 무상지원과 대략 1970년대 초까지 추진되었던 이들 국가로부터의 차관에 의한 것이므로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sup>21)</sup> 한편 1970년대 초기 이래 북한이 시도했던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생산설비 도입을 통한 산업설비 현대화계획은 수출부진에 따른 외채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함으로써 외자유치를 통한 기술 및 선진설비 흡수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별다른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2)</sup> 또한 1985년 고르바췌프 등장 이후 구소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산업현대화를 추진했으나, 이와 같은 노력은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중단되었다.

21) 통일원의 추계에 의하면, 1950~60년 동안 북한은 구소련 및 동구와 중국으로부터 약 12억 7,80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1950~75년 동안 이들 국가와 OECD국가들로부터 약 28억 5,70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받았으며, 이중 대부분이 산업설비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1975년 이후의 무상원조 및 차관은 소규모에 그쳤다.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6).

22) 1984.9~1993.12 동안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약 140건에 총 1억5천만 달러 규모로서 그중 90% 이상이 제일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합작투자이며,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은 약 70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원, 「북한의 합영사업추진실태」, (서울: 통일원, 1994), p. 8.

북한은 1960년대 이래 추진해 온 '자급적 경제' 건설정책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했으며, 양적 팽창 및 산업영역 확대에 주력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한 국제수준의 산업기술 습득에 실패하였다. 더구나 산업부문의 성장이 주로 양적 목표의 달성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생산단위가 생산기술의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으며, 산업 각 분야에 만연되어 온 결핍현상은 이와 같은 비효율적 성향을 악화시켜 왔다.

한편 북한은 과거 40여 년간 김일성 유일사상,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계의 획일적 경제운영, 폐쇄된 경제체제, 시장기구 작용의 배제 등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유지해 왔으며, 모든 교육은 이념지향적 행태를 보여왔다. 따라서 북한경제회복을 위한 경제효율 향상, 국제시장 개척, 선진기술 개발 및 흡수, 공정기술의 발전 등을 담당할 인적자원이 지극히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학술영역도 이념지향적 성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술개발 및 흡수를 위한 인적자원 결핍현상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 2. 경제난의 원인

앞에서는 북한경제의 결핍현상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불균형상태, 즉 초과수요나 공급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북한의 체제 및 정책특징상 필연적으로 나타난 보편적이며 장기적인 현상임을 보였다. 여기에서는 북한경제의 어떠한 체제특성 및 정책변수의 상호작용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부족현상을 가져왔는가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북한의 부족현상은 체제이념에 따른 발전전략과 중앙계획경제 운영상 나타나는 비효율성,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산업불균형 확대 재생산기제, 대외경제관계의 결함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가. 주체사상과 자급적 경제 추구

1960년대 초, 중·소분쟁 악화 및 사회주의 동맹국들로부터의 원조감소와 새로이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급적 경제 및 군사체제 건립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1차 7개년계획 이래 자급적 중공업 및 군수산업체제 건설을 위해 대부분의 가용자원을 투입하게 되었다. 다음의 <표 2-4>에서 보듯이 1965년의 경우 전체 재정투자 중 66.7%가 산업부문에 투자되었고, 그중 87.3%가 중공업부문에 투자되었으며, 이와 같이 편중된 투자구조는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lt;표 2-4&gt; 북한의 투자구조

(단위: %)

	1961	1962	1963	1964	1965	1969	1970
전체산업*	58.1	55.8	56.0	65.0	66.7	56.6	-
중공업**	69.7	63.7	68.2	73.8	87.3	-	80.7
전 기	11.1	12.9	14.6	11.5	-	-	-
석 탄	9.9	9.9	12.6	14.7	-	-	-
광 업	16.3	15.7	17.5	19.4	-	-	-
야 금	6.2	5.0	5.8	6.1	-	-	-
기 계	9.1	7.4	10.1	11.1	-	-	-
경공업**	30.3	36.3	32.8	26.2	12.7	-	19.3

\* : 전체 정부투자액 중의 비중

\*\* : 전체 산업투자액 중의 비중

출처: 「조선중앙연감」(1963, 1964, 1965); 「로동신문」, 1970.11.10.

Bon-Hak Koo,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p. 116에서 부분적으로 재인용.

자급적 중공업체제를 위한 편중된 투자구조는 북한과 같이 에너지 및 생산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경제에 심각한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더욱이 최소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체계하에서 중공업분야 내에서의 투자 역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의사결정권자들의 기호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치의 비효율성을 가중시켰다. 즉 광범위한 중공

업영역에 대한 동시적 투자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非特化에 의한 투자비용 증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생산단위 역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중공업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는 필연적으로 소비재 공업 및 농업과 사회간접자본 부문이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재원을 흡수하였고,<sup>23)</sup> 북한은 경제전반에 걸친 부족현상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물자부족으로 인해 건설공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재 공급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북한당국은 중점 건설항목을 지정하여 자원을 집중동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타분야의 물자 부족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국가차원의 자급적 경제건설을 위한 투자정책과 이에 따른 결핍현상의 악화는 생산단위 차원의 특화와 규모의 경제실현을 저해함으로써, 이중적 비효율성을 가져왔다.<sup>24)</sup> 즉 기형적 투자구조와 양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 계획기제하에서

---

23) J. Kornai는 결핍형 경제하에서 생산재 부문과 소비재 부문은 같은 투입제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재 부문의 결핍은 소비재 부문의 결핍을 가져온다고 파악하였다. J. Kornai, *Economics of Shortage*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80), ch. 14.

24) 소비에트형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국가 및 기업차원의 이중적 비특화로 인한 비효율성에 관한 논의는 Jan Winiecki, *The Distorted World of Soviet-Type Economies*, pp. 73~78 참조.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생산재 및 부품 확보가 관건이 되었다. 따라서 생산단위는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자체생산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非特化 및 非適正 생산규모로 인한 자원낭비 현상이 심각하게 되었다.<sup>25)</sup> 한편 이와 같은 국가 및 생산단위의 자족적 투자구조 및 양적 목표의 추구는 연구개발비 투입을 통한 자원절약형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어렵게 만들었다.

#### 나. 경제체제 운영기제의 비효율성

중앙계획형 사회주의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계획 실행상의 부작용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원낭비는 북한경제의 부족현상을 누적시켜 왔다. 명령형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계획실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결과가 축적되어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은 북한경제에도 적용된다.

첫째, 外延的 성장정책하에서 생산단위는 생산비용 및 경영 활동 결과의 손익에 대해 둔감하며, 단지 양적 생산목표 달성을 추구하게 된다. 특히 당국의 '연성예산제약'하에서 생산단위는 생산량에 비해 과도한 에너지 및 투입재를 사용하게 되

25) 근래에 강조되고 있는 연합기업소 제도는 관련 생산단위간에 생산재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산업분야별 독점구조를 강화시키고, 관련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며, 또한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한 투입재를 비축하게 된다.<sup>26)</sup>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생산재부문이 기타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투입재를 흡수하게 되므로, 경제전반에 걸쳐 부족현상이 확대되며, 결과적으로 판매자 시장이 형성되어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된다.

둘째,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목표 설정과 강제적 계획추진 및 양적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인센티브체제로 인해 생산단위나 지방 행정단위는 계획 추진실적이나 수행능력에 관해 '허위보고'를 하게 되며, 보고용 통계자료를 조작할 동기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허구적 생산실적 및 계획에 기초하여 작성된 중앙계획은 실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게 된다.

셋째, 판매자 시장의 만연 및 양적 생산목표의 추구로 인해 생산재와 원자재는 필요한 품질 및 규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며, 적절한 공급 시기 및 장소를 맞출 수 없게 되므로, 이로 부터 야기되는 부작용은 곧 경제전반에 걸친 부족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sup>27)</sup>

---

26) 명령형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의 투입재 비축경향에 대해서는 J. Kornai, *Economics of Shortage*, ch. 5 참조. 한편 여기서 연성예산 제약은 기업이 경영활동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거시경제적 자원조달이 충족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7) J. Winiecki, *The Distorted World of Soviet-Type Economies*, p. 6.

넷째,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물자수급 계획(material balances)에 의한 자원배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통계조작, 품질 및 규격 미달과 기업의 투입재 비축경향에 따라 불확실성의 정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계획기간 중에 상황변화 및 부족현상 악화에 따라 당초의 계획은 수시로 수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여타부문의 결핍현상이 가중된다.

다섯째, '연성예산제약'하에서 생산단위는 맹목적인 확장용 투자를 선호하게 되고,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에는 둔감하게 되며, 투자항목에 대한 계획당국의 허가를 획득하는 경우 생산원자재 공급상의 우선권 등 특혜가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우선 계획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해 생산단위는 필요물자 및 재원규모를 과소평가하여 투자신청을 하게 되며, 계획당국은 동시에 여러 투자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 신청된 투자규모를 다시 축소하여 허가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경우 투자계획이 실행되면, 물자부족 정도가 악화되며, 건설공기가 연장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재화공급능력에 차질이 생기며, 결핍현상이 심화된다.<sup>28)</sup>

28) 헝가리의 경우 자본회임기간이 계획보다 50~100%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 Brody, "About investment cycles and their attenuation," *Acta Oeconomica*, vol. 31 (1983). 북한의 경우에도 많은 건설프로젝트의 건설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기간 내에 완성

#### 다. 부족현상의 확대 재생산 기제

북한은 1960년대 이래 경제계획 기간 사이에 조정기를 두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간 불균형으로 인한 결핍현상은 악화되어 왔는데, 이는 산업불균형과 결핍현상의 동태적 상관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급적 경제체제 건설을 추진해 온 북한경제는 산업간·산업내 비특화와 비적정 규모의 생산, 그리고 계획실행 과정의 비효율성 및 산업기술 낙후 등 요인으로 인해 만성적인 중간재 및 원자재 부족현상에 시달려왔다. 특히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난은 자급적 중공업체제의 건설을 위협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대응은 곧 에너지 및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증대로 나타났다.

<표 2-4>에서 보듯이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중공업부문 중 석탄 및 기타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게 되어 여타 기계 및 야금부문에 대한 투자증대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1964년의 경우 전체 공업부문에 대한 총투자 중 45.6%가 전력 및 석탄과 기타 광업부문에 투입되었다. 생산원자재 부족현상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는 곧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

---

되는 경우는 김정일 혹은 김일성의 현지지도에 의존한 사업이다.

였다. 따라서 북한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자급적 중공업체  
계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야금 및 기계부문은 오히려 투자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원사용의 비효율성과 석탄 및 기타 광업부문  
에 대한 투자수요 증대, 그리고 여타 중공업부문의 상대적 투  
자부족으로 인해 북한은 자급적 공업체계 건립을 위해서는  
중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결핍현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게 되  
었다.

#### 라. 대외경제관계의 비효율성

북한의 부존자원과 경제규모를 고려해 볼 때, 대외경제관계  
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비록 자급적  
공업체계 건설을 추구해 왔으나, 원유를 포함한 공업용 원자  
재 및 생산설비는 구소련, 중국 및 일본 등으로부터의 지원  
및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체제 비효율성으로 인한 만성적 부  
족현상과 기술낙후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산업기술 및 원자재  
수입 가능여부는 경제성장의 관건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자급적 공업건설 정책에 따라 산업특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비교우위의 개발에 실패했으며, 이는 곧 상  
품 수출능력의 결여와 무역패턴의 낙후성으로 나타났다. 구소

련 및 동구권 변혁 이전 시기에 북한은 주로 구소련으로부터의 지원 및 바터무역에 의존하여 생산원자재 및 생산설비를 확보했으며, 이들 국가의 체제 변혁 이후에는 중국의 지원성 수출과<sup>29)</sup> 바터형식의 변경무역에 의존하여 주요물자를 조달하였다. 그러나 중국 역시 시장지향적 개혁정책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지원성 교역을 지속하기 힘들어지자, 최근에는 북·중무역규모의 급속한 감소를 겪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원유 및 곡물 등 필수적인 상품의 수입을 위해 북한경제의 자체수요에 대한 공급도 부족한 석탄, 철강 등 생산재를 수출해야 하는 비효율적 무역구조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경제전반의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생산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산업가동률 저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29) 여기에서 지원성 수출이란 국제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적용하거나 청산계정을 활용한 이후 정치적 협상에 의해 이를 탕감해주는 실질적 지원형태의 수출을 의미한다.

## 제Ⅲ장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성과 변화전망

### 1. 경제정책 동향

북한은 근래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및 대외 무역 분권화 등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완충기 동안 우선순위를 농업과 경공업에 두겠다는 대내경제정책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당과 각급 행정·경제 부서는 물론 군사부문까지도 무역 등 자체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금인상에 더해 소규모 개인식당 개설을 허용하고 텃밭 개간을 장려하는 등 유휴자원 활용 및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당조직 선전선동부를 통해 시·군단위의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시의 식량난 해소와 농촌의 노동력 보충을 위해 도시지역 주민의 농촌이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동원가능한 투자재원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0)</sup>

30) 현재(1995.7) 나진·선봉지역 건설실태는 다음과 같다: 국내지역과 나진·선봉지역을 구분하는 약 90km의 울타리 공사 완료; 나진-원정간의 광섬유케이블 공사 완료 및 중국측 통신망과의 연결; 남양-학

농업부문에 있어서 북한은 1994년 이래 협동농장을 군단위의 공업기업소와 결합하여 국영 농업연합기업소로 개편하고 독립채산제를 강조함으로써, 농업용 공업원자재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했으나, 산업가동률 저하와 무리한 국영소유제의 추진으로 인해 농민의 근로의욕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대외경제부문에 있어서 1994년도 북한의 자본주의권과의 교역은 총교역액의 61%에 이른 반면, 중국 및 구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은 39%로 감소함으로써 처음으로 대자본주의권 교역비중이 이들 국가와의 교역비중을 상회하였다. 북한의 수출상품구조에 있어서는 최대의 수출품목이던 비철금속 수출이 36% 감소한 반면, 방직용 섬유제품이 최대의 단일 수출품이 되었다.<sup>31)</sup> 그러나 이는 북한의 비교우위 품목인 노동집약적 방직산업이 발전한 결과라기보다는 에너지 집약적인 광업 및 중공업 생산의 감소폭이 커서 방직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sup>32)</sup>

근래에 북한은 미국 및 독일 등 서방공업선진국과의 경제

---

송간 철도전기화 공사 거의 완료; 비파관광지 도로공사 거의 완료; 나진-원정 및 청진-회령간 도로 건설, 나진항 세관 건설, 국제통신센터 건설 진행 중.

- 3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한 현안 레포트 95-2호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5.8).
- 32) 1994년도 방직상품의 실제 수출액은 전년대비 1.08% 감소했다. 위의 책, p. 15.

교류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만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증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sup>33)</sup> 그러나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북한이 의지해 온 조총련 계열기업과의 경제협력은 김일성 사후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4년 2월 이후 금년 9월까지 조총련 기업의 대북투자는 한 건도 없었으며 그 동안 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조총련의 대북한 송금규모 역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조총련 내부의 권력투쟁, 김일성 사후 조총련 기업인의 조직이탈과 실리를 추구하는 분위기, 북한의 투자환경 악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북한은 극심한 물자부족 및 조총련과의 경제협력 냉각 등 대내·대외적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sup>34)</sup>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

33) 북한은 1995.3 독일의 청산구상무역회사(DCCG)와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5.3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로 등 2명을 타이베이에 파견 투자설명회를 갖고 대만 기업과 협력합의각서에 서명하였고, 1995.6.4~6.10 동안 조선국제무역추진위원회 서기장 오태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무역실무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마그네사이트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34) 북한은 그동안 3단계(1992~95, 1996~2000, 2001~2010)로 구분하던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을 당면단계(1992~2000)와 전망단계(2001~2010)의 2단계로 조정함으로써 개발계획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있다. 북한측의 발표에 따르면이라도 1995.8까지 나진·선봉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100여 건의 계약서, 의향서, 합의서들을 채택하고, 약 2억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투자금액은 2,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1995년 5월 중국 심천에서의 나진·선봉 투자설명회를 필두로 8월에는 북경에서 위원장 김정우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나진·선봉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수출증대를 위해 금년도에 대외경제기관을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무원 각 부 및 위원회가 관장해 오던 주요 무역상사들을 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편입시키고, 외자유치 및 설비 수출입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전담하게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한편 이론적 측면에서 북한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최근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과 공식간행물에서 부단히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무오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sup>35)</sup> 이면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기구의 접목 및 국제분업체제에의 편입방안 등 개혁방향에 관한 모색과정에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최근의 동북아 경제협력 관련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북한대표의 논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이와 같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sup>36)</sup>

35) 김정일은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10.2).

36) 이동근, “세계의 발전추세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협력과 교류를 받

(생략) ……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와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는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협력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계획적운명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시장조절을 배합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경제체제안에서도 계획화와 시장조절을 적절하게 결합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동북아세아나라들이 서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정신에서 분업과 협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한다면 …… 다같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 (생략)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아직 비교우위 개발 및 시장기구의 활용을 통한 대외교역 확대나 계획과 시장의 결합방법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기구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정책 및 선전부문 실무담당자들의 이념적 경직성과 기득권 보호 동기 등으로 인해 아직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

---

전시키는 것은 21세기 번영하는 동북아세아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중국 심양, 요녕 사회과학원 주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과 사회발전’에서 발표, 1995.8.17).

&lt;표 3-1&gt;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관련 법령 정비 현황

시기	외자유치관련 법령
1984. 9. 8	합영법
1985. 3. 7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1985. 3.20	합영법시행세칙
1985. 5.17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외국인소득세법세칙
1991.12.28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1992. 4. 9	헌법제37조(외국과의 합영, 합작의 근거 규정)
1992.10. 5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1992.10.16	합영법시행세칙(개정)
1993. 1.31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의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10.27	토지임대법
1993.11.17	세관법
1993.11.24	외국투자은행법
1993.11.29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1993.12.30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1994. 1.20	합영법(개정)
1994. 2.21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1994. 3.29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994. 4.28	자유무역항규정
1994. 6.14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체류 및 거주 규정
1994. 6.27	의화관리법 시행규정
1994. 9. 7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1994.12.28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
1995. 2.22	대의경제계약법
1995. 4. 6	보험법
1995. 6.28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1995. 7.13	합영법시행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중계집임자대리업무규정

요컨대 북한은 1994년부터 3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방침으로 정했으나, 투자구조 및 경제운영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틀 속에서 관리방법을 개선해 왔다. 최근 북한의 정책변화 방향은 ① 임금인상 및 장려금 제도와 경제단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② 나진·선봉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집중, ③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 분권화 등 수출 인센티브의 제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와 같은 북한의 정책조정이 극심한 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의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이 바뀔 것인지 혹은 현재의 정책에 머물 것인지는 정책 파급효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간단한 북한의 거시경제모형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취해 온 경제정책의 한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2. 현단계 경제정책의 한계성

앞에서 논의된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성은 북한경제체제의 대표적 특징을 보여주는 거시경제모형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s)을 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북한 경제정책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포괄적 거시경제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변수간의 상호관계만 고려함으로 인해 범할 수 있는 국지적 분석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37)</sup>

우선 물자부족현상으로 인한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불균형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계획당국이 노동자들의 실질 노동 공급량( $N_s$ )과 중간재 수입량( $R$ )에 의해 공급측면에서 결정되는 북한경제의 총산출량( $Y$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sup>38)</sup>

$$Y = Y(N_s, R) \quad Y_N > 0, \quad Y_R > 0 \quad (1)$$

노동자들의 희망 노동공급량(노동시간/년)( $N_s$ )은 계획당국에 의해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수준( $W$ )과 절대적 결핍 상황하에서 식량 및 생필품 등의 암시장 거래를 위한

37) 거시경제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부분적(partial) 분석의 맹점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일반적(general)이고 통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8) 국가가 정한 임금수준 및 인센티브 체제하에서 국영기업의 노동수요( $N_D$ )는 계획당국의 계획생산량( $P$ )에 의해 결정되며( $N_D = N_D(P)$ ), 자원부족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동원에 의해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동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므로, 총산출량은 노동공급량( $N_s$ )에 의해 결정된다.

화폐초과수요( $E_C$ )에 의해 결정된다.

$$N_S = N(W, E_C) \quad N_W > 0, N_{E_C} > 0 \quad (2)$$

북한경제의 총산출량은 공급측면에서 결정되므로, 주민 실질소비( $C_A$ )는 총산출량에서 계획당국이 결정한 투자( $I$ )와 수출인센티브( $e$ )에 의해 결정되는 수출( $X$ )을 제외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희망 소비수준( $C$ )은 국정 임금 및 장려금 수준과 암거래를 통한 생필품 조달을 위한 화폐초과수요( $E_C$ )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C_A = Y - I - X(e) \quad X_e > 0 \quad (3)$$

$$C = C(W, E_C) \quad C_W > 0, C_{E_C} < 0 \quad (4)$$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물자 부족현상은 상품시장에 존재하는 초과수요( $E_G$ )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E_G = C + I + X(e) - Y \quad (5)$$

또한 부족현상이 일반적인 북한경제에서 주민들은 암거래 등 여러 통로를 이용하여 생필품을 구입·소비해야 하므로 일

반적으로 화폐초과수요( $E_C$ )가 존재하는 바, 이는 화폐유통속도의 역수( $k$ )와 실질소비의 곱에서 계획당국에 의한 화폐공급( $M^s$ )을 감한 것이 된다.

$$E_C = k\{Y - I - X(e)\} - M^s \quad (6)$$

한편 외화로 표시한 북한의 무역수지( $B$ )는 수출인센티브 등에 따라 결정되는 수출에서 계획당국이 결정하는 중간재의 수입량을 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반적 경향과 북한의 대부분 수입이 원유와 산업원자재 및 곡물 등 중간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재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sup>39)</sup>

$$B = X(e) - R \quad (7)$$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북한경제의 불균형은 기업운영 및 기업거래에 사용되는 기업 은행예치금에 대한 초과수요( $E_D$ )인 바, 이는 총산출량과 국정 임금수준 및 계획에 의한 투자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의 예치금 수요( $D$ )에서 계획당국에 의한 기업예치금 공급( $S_E$ )을 감한 것이다. 북한경제가

39) 북한의 경우 수입곡물이 노동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계획당국에 의해 현물 배급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중간재로 파악될 수 있다.

만성적인 투자자원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에 근거해 볼 때, 기업예치금에 대한 초과수요는 상존한다고 하겠다.

$$E_D = D(Y, W, I) - S_E \quad (8)$$

위에 설명한 거시경제모형을 요약한다면, 북한경제는 노동·상품·화폐·기업예치금·외환의 다섯 부문으로 이루어지며,<sup>40)</sup> 이들 각 부문은 만성적인 초과수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의 모형에서는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 국정가격을 상정하고 있으며,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가격수준은 1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한 북한 거시경제모형의 비교정태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8)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4부문의 수요·공급 균형상태를 설정할 수 있다. 위의 모형에서는 5부문을 상정하고 있으나, 왈라스 법칙(Walras's Law)에 의하면 5부문의 초과수요 합은 0이 되어야 하므로 북한경제모형의 비교정태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4부문의 解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

40)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반적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기업은 영자금(예치금) 공급과 일반화폐의 공급은 구분된다.

$$F_1 = N_D - N(W, E_C) = 0 \quad (9)$$

$$F_2 = C(W, E_C) + I - Y(N_S, R) - E_G = 0 \quad (10)$$

$$F_3 = k \cdot \{Y(N_S, R) - I - X(e)\} - M^s - E_C = 0 \quad (11)$$

$$F_4 = R - X(e) + B = 0 \quad (12)$$

(9)~(12)가 나타내는 노동, 상품, 화폐, 외화 등 4부문의 관계식에서 계획당국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外生變數는 노동 수요(N), 노동인센티브(W), 투자(I), 중간재 수입(R), 수출인센티브(e), 화폐공급( $M^s$ ) 등이며, 거시경제모형에 의해 결정되는 內生變數는 노동공급( $N_S$ ), 상품초과수요( $E_G$ ), 화폐초과수요( $E_C$ ), 무역수지(B) 등 이다.

크레이머 법칙(Cramer's rule)을 사용하여 4부문의 균형상태 관계식 (9)~(12)로부터 외생변수(Z) 변화에 따른 내생변수의 변화방향을 알기 위해 비교정태분석의 해를 구해보면 <표 3-2>와 같다.<sup>41)</sup>

41) <표 3-2>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시모형의 안정성(stability) 보장을 위한 조건 ( $kY_N N_{E_C} < 1$ ) 등 몇 가지 변수 반응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북한경제는 대체로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 없이 이들 가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크레이머 법칙의 적용방법은 <부록 1> 참조.

&lt;표 3-2&gt;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지표 변화방향

Z:정책변수	dN/dZ	dE <sub>G</sub> /dZ	dE <sub>C</sub> /dZ	dB/dZ	dY/dZ
W	+	+/-	+	0	+
e	-	+	-	+	-
I	-	+	-	0	-
R	+	-	+	-	+
M <sup>s</sup>	-	+	-	0	-

분석 결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이 근래에 추진하는 체제를 속에서의 노동인센티브 개선이나 무역분권화 등 수출촉진정책, 그리고 나진·선봉지역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다같이 부족현상이나 국민총생산 감소 추세를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임금인상 등 노동인센티브(W) 제공은 상품초과수요를 악화 혹은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장려금 제도의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인 노동인센티브는 1992년 3월의 경우와 같이 일률적인 임금인상 형태를 취한다고 볼 때, 이는 희망 소비규모를 증대시킴으로써 상품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미미한 총산출 증가효과가 있을 뿐이다.

근래에 북한은 근로자와 농민, 그리고 개별 경제단위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인센티브체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심각한 소비재 공급부족,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의 편차,<sup>42)</sup> 사상적 경직성에 따른 한계성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지속적 침체는 개인의 근로의욕은 물론 경제단위의 적극성을 감퇴시키고 있다. 특히 부족현상의 심화에 따라 경제계획이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및 부서간의 이기적 경향이 가중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물자 부족현상은 체제결함에 기인하는 바, 이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지 않는 한 앞의 거시경제모형 분석결과를 통해 보듯이 인센티브체계 개선의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3-2>에 의하면, 무역분권화 등 수출인센티브(e) 제공 정책은 노동공급 의욕을 저하시키고, 총산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출상품 공급능력이 지극히 낮으며 만성적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산업이

---

42) 북한의 소비재는 대부분 당국의 배급에 의해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정된 배급량의 10~20%선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재의 부족정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암시장의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국정가격이 1kg당 8전(북한원)인 쌀의 암시세는 23~35원, 국정가격이 한 켈레 14원인 운동화의 암시세는 40~70원, 국정가격이 한 대에 600~840원인 녹음기의 암시세는 5,000~15,000원으로 각종 상품의 암시세는 국정가격의 3배~50배 수준으로서 북한의 소비재 부족정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민족통일연구원의 귀순자 면담자료).

필요로 하는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를 수출해야 하므로 주민들의 실질소비 가능 물자를 흡수함으로써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총산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계획당국은 원유 및 원자재 등 중간재 수입 증가를 통해 총산출을 증가시키고, 상품초과수요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나, 북한의 외화부족현상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이는 시행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정가격과 과도하게 평가된 환율로 인해 북한경제는 비교우위를 실현할 수 없으며, 무역이 무역상사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개발 혹은 국제시장 수요반영에 있어서 생산단위의 적극성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경제가 부족현상의 만연에 의한 판매자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상사와 내부수요자 사이에는 물자확보를 위한 경쟁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원료공급 및 외화보유 등 측면에서 가시적인 편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생산단위는 생산원자재를 교환할 수 있는 내부수요자 혹은 암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생산단위에 대한 대외무역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부문에 대한 공적·사적 정치권력의 개입은 무역경로 및 구조를 왜곡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수출상품 공급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비해 수입수요는 매우 강하며, 평가절상된

환율과 암시장의 창궐로 인해 수출입권한에 따른 편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종종 수출입이 무역상사의 결정과 계약대로 수행되지 않고 급작스러운 당 혹은 권력기관의 간여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sup>43)</sup> 결과적으로 체제개혁이 따르지 않은 북한의 무역촉진정책은 자원낭비 및 배분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내부경제의 부족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구조적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경제에 나진·선봉지역 건설위주의 투자정책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에서 보듯이, 북한이 제한된 투자자원을 자본회임기간이 긴 '지대'건설에 투입하는 경우 소비부문의 물자에 대한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의해 총산출은 감소하고 상품초과수요 정도가 악화되어 거시경제 불균형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노동력 이주를 위한 주거지 건립<sup>44)</sup>과 수입대체산업기지 및 대규모 경공업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대량의 생산재 및 건설재가 수요되

43) 중국의 대북한 무역종사자 면담결과.

44) 나진·선봉지역의 주민 중 노동가능인구는 7만 6천 명에 불과하므로, 본격적으로 지대건설이 추진될 경우, 타지역으로부터의 대규모 주민 이주가 불가피하다. 배종렬, "접경 3국 개발계획간의 일관성 분석," 김익수 편,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에 대한 분야별 평가」(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 122.

며, 나진·선봉의 지리적 입지상 이의 공급은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경제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수출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외화가득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투자재원 및 생산재 공급의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생산재 공급차질과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인해 건설공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 경우 북한의 자원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3-2>에서 화폐공급( $M^s$ )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함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이 화폐공급 증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경우 현재의 비효율적 인센티브체계와 절대적인 소비재 공급부족 상황에서 이는 곧 암시장으로의 유입자금 증대를 의미하며, 오히려 노동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총산출 감소와 상품초과수요 증가 및 은닉성 인플레이션의 악화라는 3중적 부작용을 낳게 된다. 실질적으로 1992년 3월의 임금인상을 통한 화폐공급 증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낳았고 북한은 동년 7월 구화폐를 신화폐와 1:1로 교환함으로써 부작용을 치유하려 했다.

위의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상품부문과 화폐부문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룬 상태를 나타내는 선 CC와 MM을 구해보면 식 (13), (14)로 표시할 수 있다. 이를 노동인센티브( $W$ )와 수출인센티브( $e$ )를 축으로 하는 평면에 그려

보면 <그림 3-1>과 같으며, 이들의 기울기는 각각 (15),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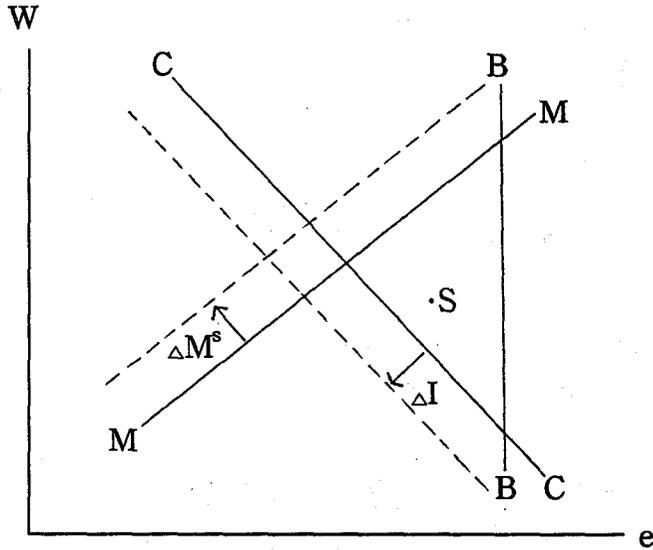
$$E_G = C(W) + I - X(e) - Y\{N(w)\} = 0 : CC \quad (13)$$

$$E_C = k[Y\{N(W)\} - I - X(e)] - M^e = 0 : MM \quad (14)$$

$$dW/de |_{CC} = -X_e / (C_w - Y_N C_w) < 0 \quad (C_w > Y_N C_w \text{ 가정}) \quad (15)$$

$$dW/de |_{MM} = X_e / Y_N N_w > 0 \quad (16)$$

북한경제가 처한 상황은 <그림 3-1>의 점 S로 나타낼 수 있는 바, 이는 상품초과수요(물자부족), 생필품 구입을 위한 화폐초과수요, 수출공급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무역적자 등 북한의 경제난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을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증대와 노동인센티브로 정리해 볼 때, 이와 같은 제한적 정책변화는 <그림 3-1>에서 CC선을 하향 이동시키고, MM선을 상향 이동시킴으로써 경제불균형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원유 등 중간재 수입 증가를 통해 물자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현재의 북한경제 능력으로 볼 때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림-1> 북한경제의 정책 파급효과

- 주: CC선 아랫부분의 상품초과수요 < 0  
 CC선 윗부분의 상품초과수요 > 0  
 MM선 윗부분의 화폐초과수요 < 0  
 MM선 아랫부분의 화폐초과수요 > 0  
 BB선 좌측의 무역수지 < 0  
 BB선 우측의 무역수지 > 0

### 3. 경제정책 변화전망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변화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체제개혁 노력이라기 보다는 부분적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회복 시도가

다. 또한 근래에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정책변화는 북한경제구조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재로 인해 북한은 금년 겨울부터 위기적 경제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김정일 정권은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과 선택가능한 정책대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 노선은 ① 경제계획기구 및 인센티브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경제개발 사업 추진, ② 부분적 시장기제의 도입 및 확대와 경제단위의 자율권 신장, ③ 전면적인 시장화 및 다양한 생산수단 소유제의 수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김정일 정권이 주어진 정치·사회적 제약조건하에서 경제회생을 위하여 이들 대안 중 어떠한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 경제정책 변화방향을 결정하는 기제로서, 김정일 및 기득권층의 정치적 입지 및 북한경제의 문제점과 정책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 선택 모형을 제시해 볼 수 있다.<sup>45)</sup>

45)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Seung-Yul Oh, "Economic Reform in

$$F(P, E) = \text{경제정책을 통한 정치·경제적 편익}[G(P,E)] \\ - \text{경제정책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비용}[H(P,E)] \quad (17)$$

여기에서,  $F(P, E)$ :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기대효용

$G(P, E)$ : 경제정책의 기대성과

$H(P, E)$ : 경제정책의 예상비용

$P = \{ \text{정치적 고려사항: 이념체제에 대한 영향, 정권의} \\ \text{정치적 입지, 외교적 파급효과 등} \}$

$E = \{ \text{경제적 고려사항: 경제현황, 기존정책의 부작용,} \\ \text{신정책의 기대효과 등} \}$

$F > 0$  : 새로운 경제정책 채택

$F < 0$  : 기존의 경제정책 고수 혹은 다른 대안 선택

위의 모형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제난을 기정사실로 인정할 때, 김정일 정권은 새로운 경제정책이 가져올 정치·경제적 편익이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거나,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북한의 경제난이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며,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제약요인과 체제개혁 경험부족으로 인해 정책변화 노력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 머물

---

North Korea: Is China's Reform Model Relevant to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Seoul: RINU, 1993), pp. 127~151 참조.

고 있음을 보았다. 즉 근래에 북한이 채택해 온 정책노선은 앞에서 제시한 3가지 대안 중 ① 경제계획기구 및 인센티브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경제개발 사업 추진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북한의 제한된 정책변화는 북한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미흡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사회적 비용이 점차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지도층에 의한 앞의 식 (17) 계산결과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할 것이며,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향후 북한은 그 동안 취해온 경제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점차 앞에서 설명한 정책대안 중 ① → ② → ③으로 정책노선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및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통제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해 ②에서 ③에 이르는 정책노선 변화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이 정책변화를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경우, 경제난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김정일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북한경제의 회복에 공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자부족현상 및 은닉성 인플레이션 악화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북한경제의 총산출 역시 침체

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나진·선봉지역의 건설계획 역시 동 지역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이익상충,<sup>46)</sup> 시장확보의 어려움, 북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인해 성공적인 외자유치가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당국은 경제난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나,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부담과 이념적 경직성, 그리고 기득권층의 반발 등의 제약조건하에서 급격한 정책노선 변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년 겨울부터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앞에서 논의된 3가지 정책노선 중 점차 현재의 ① 경제계획기구 및 인센티브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경제개발 사업 추진 노선으로부터 ② 부분적 시장기제의 도입 및 확대와 경제단위의 자율권 신장 단계로의 노선전환을 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부분적으로 시장기구 도입을 통해 경제운용체계 개선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세습체제의 한계성과 기득 관료 및 군부의 반발로 인해 정책변화는 좁은 영역에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

46)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관련, 중국은 자국영내의 훈춘지역,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중심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접경국가간에 이익이 상충되고 있으며, 북한·중국·러시아간의 인프라 연결을 위한 재원 마련 역시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변화과정은 개혁초기부터 공개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표방·선전해 온 중국의 경우와 판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sup>47)</sup>

시장기구의 적용범위 역시 당분간은 근래에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는 암거래 행위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암거래의 제도권 흡수를 위해 북한당국은 시장가격에 의한 일부 공업소비재의 거래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율 및 임금, 생산재 가격을 포함한 전반적 가격기구의 개선이나, 기업경영자율권 보장, 소유제도의 다양화 등 본격적인 체제개혁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당국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자 및 기술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지방 및 각급 행정단위에 대한 경제분권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sup>48)</sup> 또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세분화된 프로젝트 위주의 투자유치전략을 토지임대형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투자대상사업 선택의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국영 농업연합기업소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농업연합기업소 내에

47)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오승렬, “중국 경제 개혁과 시장기구의 역할,” 「현대중국연구」, 제2집 (서울: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1994), pp. 67~90 참조.

48) 특히 대외무역, 투자재원 및 생산원자재 조달 측면에서의 분권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서의 가족단위 책임생산제와 농업부산물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남북경제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정부를 배제하고 개별기업, 특히 대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선별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서방자본 유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외화획득이라는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대남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sup>49)</sup> 민간차원의 경제교류 협의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한 남북경협관련 협의를 제안하는 경우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

49) 1994년 남한은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제3대 교역대상이며, 특히 남북교역의 대부분이 남한의 반입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북한의 수출총액 중 남한의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 제IV장 남북한 경제관계 추이와 과제

### 1. 남북한 경제관계의 전개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남북한간의 경제관계에서 의미있는 변화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나타났다. 공동성명의 합의에 기초하여 구성·운영된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남북간의 경제교류에 대한 구체적 제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sup>50)</sup> 이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경제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하였다.<sup>51)</sup> 특히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서울, 1973.6.12~14)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분과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키는 동시에 경제인의 교류, 물자의 교류, 과학기술의 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상품전시회의 교환 개최, 상사의 교환 상주 등을 포함한 경제적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조치들을 실천에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sup>52)</sup>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러한

50)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다항. 통일원, 「남북 합의서」(서울: 통일원, 1994), p. 105.

51)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이 진척되는 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한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3조 다항.

52) 한국국제문화협회, 「남북대화」, 제1호, p. 23.

제안들은 5개 분과위원회(정치·군사·경제·문화·외교)의 일괄 설치를 주장하는 북한측의 주장과 엇갈려 실현되지 못하였다.<sup>53)</sup>

최초의 의미있는 일련의 남북간 접촉이 성과없이 끝난 이후, 1984년 11월에 이르러 남북 쌍방은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남북경제회담」은 남한측의 남북한 교역·경제협력제의 및 물자·기술 무상 제공용의 표명(1984.8.20), 수재물자 인수(1984.9.29~30) 그리고 북한측의 서방제국과의 자본 및 기술 합작을 위한 「합영법」 발표(1984.9.8) 등의 상황적 조건 하에서, 남한이 「남북경제회담」을 제의(1984.10.12)하고 북한이 이를 수락(1984.10.16)함으로써 개최되었다.<sup>54)</sup>

「남북경제회담」은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남북한이 경제교류·협력방안 및 경제협력기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제4차 회의에서 각각 제시한 포괄적 합의서를 기준으

53) 경제·문화·사회분야에서의 광범위한 교류를 통하여 남북 사회를 상호간에 개방하자는 서울측 주장과 정치·군사분야에서의 상호불신을 먼저 해소하자는 평양측 주장으로 나타나는 남북관계에 대한 쌍방간 이해와 접근에서의 차이를 서울측 공동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 「총과 칼을 놓자, 총과 칼을 놓으면 상호의심은 서로 풀린다.」; 남한의 입장: 「서로 오해나 의심을 완전히 풀기만 하면, 총과 칼이라는 것을 놓지 말아라 해도 놓게 되어 있다.」 「남북대화」, 1호, pp. 33~34.

54) 남북회담사무국, 「남북 경제회담 핸드북」 (서울: 통일원, 1993), pp. 7~8.

로 남북한의 주장을 검토하면,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접근방식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경제교류·협력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표현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은 물자교류·경제협력이 민족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교류·협력의 선후문제에 있어서 남한은 순수 경제적 차원에서 선교류·후협력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선협력·후교류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동시 실현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였다. 남한의 기능적·점진적·단계적 접근과 북한의 일괄적·포괄적 접근 사이의 차이는 시장 경제체제의 우위성과 파급성에 대한 신념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남한과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념적·정치적·군사적 적대관계의 관점으로부터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차이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남한이 경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중시하고, 북한이 경제공동위원회<sup>55)</sup>의 구성을 우선시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물자교역 방안과 관련하여 남북한은 많은 점에서 의견의 일치와 접근을 이룰 수 있었다. 남북한은 교류물자의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 기준으로 교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55) 경제공동위원회의 명칭으로서, 남한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북한은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제시하였다.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따라 경제공동위원회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스위스 프랑을 결제통화로 사용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거래방식은 기본적으로 청산결제방식을 활용하며, 결제업무는 남과 북의 은행이 담당하며, 관세는 면제하며, 통관·검사·사고처리는 대외거래 규정을 준용하며, 수송수단은 철도·선박·자동차를 통한 남북한의 직통거래를 활용한다는 점 등에서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교역품목 및 교역량과 관련하여 차이점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었으나, 실제적인 물자교역이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하여 남북한은 협력사업의 대상에 있어서는 의견의 접근을 보였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입장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상과 관련하여,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자연자원의 공동개발·이용을 제안하였으며, 남한은 추가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을 제안하였다.<sup>56)</sup> 경제협력의 방법, 규모, 협력사업 조건 및 문제처리 등과 관련하여, 남한은

---

56)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남북한 각각의 제안은 일정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남한의 경우, 이미 1973년 제3차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자원의 공동개발을 제안하였으며, 1982년 국토통일원장관의 20개항 「대북시범실천사업 제의」에서 공동어로 구역 설정을 제안하였다. 한국국제문화협회, 「남북대화」, 제28호(1982), p. 85. 북한이 남북 어장·어항의 개방과 공동이용을 포함한 남북 경제교류의 방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으로는 1960년 11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교류의 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데 대한 의견서”가 있다.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649~793.

경제협력사업 당사자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내세웠으나, 북한은 공동위에서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세 및 사용료, 소요물자의 조달 등에서 남북한은 일정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남북경제회담」은 1986년 1월 22일로 예정된 제6차 회의가 북한에 의해 취소됨으로써,<sup>57)</sup>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제5차 회의까지 제시된 남북한의 입장을 비교하면,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는 실제적으로 성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은 많은 차이점을 보였으나, 당시 「합영법」을 제정하고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정치·군사적으로 상호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지속해 온 남북관계에서 바라보면, 경제회담을 통하여 일순간에 남북한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의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는 1988년 우리 정부의 남북물자교역을 허용하는 「7·7 특별선언」과 후속조치<sup>58)</sup>에 의해

57) 「남북경제회담」 중단에 대하여는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40호 (서울: 국토통일원, 1986)를 참조.

58) 후속조치로는 「남북물자교류 지침」(1988.1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및 「시행령」(1990.8.9), 「시행규칙」(1990.11.9)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1990.8.1) 및 「시행령」(1990.12.31), 「시행규칙」(1991.3.27) 등이 있다.

마련되었다. 남북간의 경제관계는 이제 실질적인 물자교류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북간의 교역은 남북고위급회담이 본격적 단계에 접어들던 1991년에 들어 급속히 확대되었다.

경제분야 남북교류의 확대는 물자교류와 함께 남북 주민간 접촉에서 관광·교통을 포함한 경제부문 관련 접촉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접촉을 통하여 남한 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를 포함한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sup>59)</sup> 나아가 북한의 지역중심 개방전략에 남한의 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국제기구를 매개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실제 1991년 이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동북아 지역 경제개발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특수지위를 부여(1991.12.28)하고 추진하는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 등에 남한이 참여하려는 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북한의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는 1992년 7월 남한을 방문하는 기회를 빌어 대우자동차, 포항제철 등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삼성·럭금·대우 등에게 북한의 4차 7개년계획에 참여해줄 것을 공식으로

59) 대표적 사례로 1989년 1월 (주)현대의 금강산공동개발사업 협의, 1992년 10월 (주)대우의 남포공단에 대한 투자방문·상담을 들 수 있다.

요청하기도 하였다.

물자교류와 경제인 교류의 실질적 활성화는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를 협의·채택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던 남북고위급회담의 순조로운 진행과 맞물려 있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9월에 시작하여 1992년 9월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및 기타 「부속합의서」 등 앞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할 중요한 문서들을 합의해 내었다. 또한 1992년에 이르러서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분과위원회 회의가 수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포함한 4개의 공동위원회의 구성이 합의되었다. 남북경제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조문서로 기능할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가 1992년 9월 17일 채택되었다.

경제교류·협력의 대상 및 방법과 관련한 남북간의 합의내용은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제1장에 나타나 있다.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경제교류·협력의 분야는 ①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및 합작투자 등의 경제협력사업, ② 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③ 철도·도로의 연결, 해로·항로의 개설, ④ 우편·전기통신교류, ⑤ 국제경제 분야에서 협력 및 대외 공동 진출 등 다섯 가지로 대별된다.<sup>60)</sup>

60)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조항에서 남북은 경제협력사업의 대상 형식, 물자교류에서의 품목·규모 등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

199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남북교역 및 경제인교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1993년 봄부터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경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전반적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교역은 경제논리에 의해 뒷받침된 내적 추동력에 의하여 지속되어 왔다. 1995년에 들어 북한의 핵문제가 대북 경수로 지원을 고리로 풀려 나감에 따라 물자교류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으며, 또한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1994.11.8)가 취해짐으로써 남한 기업인들은 1994년 말부터 북한을 방문하여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 2. 남북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현황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경제관계는 물자교류를 통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정부의 「7·7 특별선언」 및 후속조치 이후 미미하게 추진되던 남북 물자교류는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과

---

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에서의 품목별 수량 및 거래조건 등 실무적 문제는 교류협력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 교류협력 당사자의 조건(법인 및 개인), 계약 형태(당사자간 직접계약 원칙), 교류물자 가격(국제가격 기준, 당사자 협의), 대금결제 방식(청산결제 방식 원칙, 당사자 협의), 관세(무관세 및 민족내부거래 원칙) 등에 관하여는 「남북경제회담」(1984.11~1985.11) 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이 그대로 합의되었다.

함께 활성화되었다. 현재까지 남북한 물자교류의 현황을 승인 및 통관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남북한 물자교류 승인현황(1988.10~1995.10)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총반입	위탁가공	총반출	위탁가공	총합계	위탁가공
1988	1,037	-	-	-	1,037	-
1989	22,235	-	69	-	22,304	-
1990	20,354	-	4,731	-	25,085	-
1991	165,996	23	26,176	13	192,172	36
1992	200,685	556	12,818	413	213,503	969
1993	188,528	4,385	10,262	3,611	198,790	7,996
1994	203,521	16,598	25,423	11,966	228,944	28,564
1995. 10	197,394 (160,855)	22,243 (14,023)	62,157 (15,904)	16,328 (10,052)	259,551 (176,759)	38,751 (23,304)
총계	999,750	43,805	141,636	32,331	1,141,386	76,316

( )는 1994년 동기실적임.

출처: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52호  
(1995.10.1~10.31).

<표 4-2> 남북한 물자교류 통관현황(1988.10~1995.9)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	금액	건수	품목	금액	건수	품목	금액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8	21	12,278	4	3	1,187	82	24	13,465
1991	300	50	105,722	23	17	5,547	323	67	111,269
1992	510	81	162,863	63	24	10,563	573	105	173,426
1993	601	77	178,166	97	21	8,425	698	98	186,591
1994	708	83	176,298	267	42	18,248	975	125	194,546
1995.1~9	716 (525)	86 (69)	177,329 (135,276)	1,231 (154)	65 (38)	48,619 (10,884)	1,947 (679)	152 (99)	225,948 (146,160)
총계	2,979	-	831,311	1,686	-	92,658	4,665	-	923,969

( )는 1994년 동기실적임. 1995년 수치는 대북 쌀지원을 제외한 것임.<sup>61)</sup>

출처: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52호 (1995.10.1~10.31).

통계 자료에 나타난 남북한 물자교류의 현황에서 몇 가지 특징적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91년 이후 남북간 물자교류는 급속한 진전을 보였으며, 이는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및 「남북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의 채택으로 요약

61) 쌀지원(1995.6~8)을 포함한 대북 반출 총액은 1995년 9월 말 현재 281,595천 달러이다.

되는 남북한 정치관계의 개선의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남북 물자교류에서 반출입의 비중은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거의 90%에 달하며,<sup>62)</sup> 또한 반·출입 품목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63)</sup> 셋째, 위탁가공교역이 1993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94년의 경우 위탁가공교역량(2,856만 달러)이 승인기준으로 남북한 총교역량(2억 2,894만 달러)의 12.5%에 달하였다. 아울러, 남북한 물자교류는 주로 간접교역에 의존(95% 수준)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한 물자교류의 총량은 남한의 무역(1994년 무역총액: 1,983.6억 달러)에서,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 경제에서 남북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높다. 1994년의 경우, 남북교역의 총거래액이 북한 총무역액(21.1억 달러)의 9.2%에, 특히 남한으로의 반입이 북한 수출액의 21.0%에 달한다. 이는 최근 무역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북한 대외경제에서 남한과의 교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또한 북한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는 북한의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으

62) 1995년 9월까지 총통관액으로 보면, 반입이 전체 교역량의 90.0%에 달한다. 1994년부터 위탁가공교역에 의한 반출이 증대함에 따라, 반입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63) 반입품목(통관기준)에서는 철강·금속제품이 주종(1994년 누계로 79.8%)을 이루고 있다. 반출품목(통관기준)에서는 1992년까지 화학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증대와 함께 섬유류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며, 따라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북한의 공식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남북 물자교류는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이후에도 통관기준으로 남북 물자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남북 물자교류의 자생적 발전가능성 내지는 일정 수준 유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북 물자교류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전의 제약을 받고 있다. 우선 지적될 수 있는 점은 ①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인한 수입역량의 부족, ②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의 제한, ③ 간접교역 및 수송체계 미흡으로 인한 물자교역에서의 경제적 비효율성<sup>64)</sup> 등이다. 아울러, 북한이 정치·사회적 이유로 남한 상품의 북한 반입 및 남북한의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물자교류 확대를 주도할 새로운 교역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은 대기업 중심으로, 경공업 분야(의류, 가방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up>65)</sup> 위탁가공교역의 현황을 1995년 10

64) 간접교역의 경제적 비효율성은 ① 거래성사의 지연성·비효율성, ② 불필요한 거래비용, ③ 통제되지 않은 위험부담, ④ 사고발생시 처리과정의 불명확성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에 덧붙여, 해상운송에 기초한 남북한 수송체계는 주로 남북한 항구간의 부정기 항로 및 제3국적선에 의존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남북한 수송체계에 대하여는 권오, “남북한 경제교역 추이와 대응방안” (한성대 광복50주년기념 통일문제세미나, 1995) 참조.

65) 위탁가공교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업은 1992년 이전에는 코오롱상

월 말 현재 반입 승인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197건에, 2,224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58.6% 증가한 수준이다. 위탁가공교역의 주요 품목은 주로 셔츠, 바지, 재킷, 스웨터, 코트, 잠바, 장갑, 아크릴사 등이며, 참여기업은 삼성물산(주), 엘지상사, (주)대우, 고합상사, 한일합성섬유, (주)신원 등 19개 회사이다. 1995년도 위탁가공교역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엘지상사가 칼라TV 10대를 위탁가공하였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위탁가공교역은 ① 단기간 내에 제한된 설비만으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② 기업 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유주의기업경영원리 및 시장경제원리의 파급을 통제할 수 있으며, ③ 수출품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경제협력사업보다 용이한 외화획득 방법이며,<sup>66)</sup> ④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투자 여건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의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sup>67)</sup> 위탁가공교역을 추진하는

---

사, 삼성물산(주), (주)쌍용, 세영코오퍼레이션, 한일합성섬유 등이었다. 1995년 10월까지 위탁가공교역에 참여한 기업은 승인기준으로 총 27개 사이다.

- 66) 위탁가공교역을 통해 북한이 위탁가공비로 획득할 수 있는 외화획득율은 위탁가공수출총액의 약 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의 경우, 북한이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제3국가들과의 의류 위탁가공교역을 통해 획득한 위탁가공비는 2,433만 달러이며(의류 원부자재 수입: 132,909천 달러; 의류 완제품 수출: 157,239천 달러), 이는 의류 완제품 수출의 15.5%에 달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 투자실무」(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 참조.
- 67) 최병선,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의 현황”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 동향 1994년도 상반기」, 1994) 참조.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든 위탁가공교역은 ① 직접투자보다는 위험이 적으며, ② 북한에 진출하여 완제품의 자국내 반입 및 제3국으로의 수출을 통해 무역활동을 확장할 수 있으며, ③ 대북한 직접투자의 시범적 성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남북한간의 위탁가공교역은 ① 남한 기업으로 하여금 북한 노동자의 상품생산 기술수준 및 생산공정 관리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② 남북한간의 경제운용원리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위탁가공교역의 장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공업 중심 저기술 사용의 위탁가공교역이 고품질·고기술 상품의 위탁가공교역으로 발전되어야 한다.<sup>68)</sup>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는 (주)대우의 남포공단에 대한 경공업 분야 직접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주)대우의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업종은 셔츠·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 세 개 사업이며, 투자규모는 512만 달러이고, 투자유형은 합영이다. (주)대우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3명의 기술자를 6~9월 동안 파견하였으며, 현재는 5명을 재파견하고 있다. 기타, 고탄물산(주)(의류·봉제, 직물, 이불·솜, 수지병 등 4개 사업, 총투자 규모 686만 달러), (주)한일합섬(스웨터, 봉제, 모포 등 3개 사업, 투자규모

68) 현 단계에서 위탁가공교역은 당분간 남북교역의 활성화에 주요한 기여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직접투자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탁가공교역은 상황적 조건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직접투자의 발전을 예비하는 교육과정이다.

580만 달러), (주)국제상사(신발생산, 투자규모 350만 달러), (주)녹십자(의약품, 투자규모 330만 달러), 동양시멘트(주)(시멘트 저장용 싸이로 1기 건설·운영, 투자규모 300만 달러), 동통해운(주)(항만 하역설비, 투자규모 500만 달러) 등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놓고 있다.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를 포함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하여 남한 경제인 및 기술자의 북한 방문은 북한 핵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체하였으나, 정부에 의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가 발표된 1994년 말 이후 재개되어 1995년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북한을 방문한 남한의 민간기업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심을 보인 경제협력사업은, 지역별로는 나진·선봉 및 평양·남포 지역에 대한 투자이며, 사업별로는 의류·신발·식음료·전자제품 등에서의 위탁가공교역, 컨벤션센터·통신센터·항만시설 등 기반 시설 관련 사업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남북한 경제관계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획기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현재까지의 태도로 미루어 보면, 북한은 정치·사회적 이유로 남한과의 본격적인 경제교류·협력을 제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우리 민간기업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3. 남북 경제관계의 과제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남북한 정치·군사 관계, 남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동북아 정치·경제질서가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들 주요 결정요인들 각각의 상태는 전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한 경제관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각의 요인이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예지와 함께 기업 차원에서의 경험전략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전반에서 정치·군사분야와 경제분야의 관계는 단순히 일방에 의해 타방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규정되거나, 순수히 상호보완적이거나, 반드시 충분·필요조건적이지는 않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때로는 경제관계가 정치·군사관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돌파구로서 작용하였으며(1984~85년 경제회담 전후), 때로는 정치·군사관계에서의 긴장완화가 경제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며(1991년 이후), 때로는 경제관계에서의 진전이 정치·군사관계에서의 긴장 격화를 제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현재 지나친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은 현재 남북한 경제에 존재하는 생산요소 보유 상황 및 경제발전단계의 보완성<sup>69)</sup>을 활용하여 남북한 경제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 경제가 자연스럽게 경제공동체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세력균형을 포함한 동북아 정치·경제질서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남북한의 국력 및 국제질서를 근거로 평가할 때, 남북한의 세력관계는 남한에게 유리한 상태이며<sup>70)</sup>, 따라서 북한은 패권적 혁명전략보다는 방어적 체제수호 전략을 자신의 대남전략의 기조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은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통하여 동북아 질서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sup>71)</sup> 북·미, 북·일 관계개

69) 남북한 경제의 보완성에 대하여는 김준한 외,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방안」(서울: 산업연구원, 1992) 참조.

70)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개정판)」(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71) 김태일·전상인은 북한의 대남정책이 1980년대 이후 「현상유지적 경쟁전략」으로 이행하였다고 분석한다. 김태일·전상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戰略」(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그러나, 동북아 질서가 1990년대 이후 북한에 불리한 불균형질서로 이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남정책을 포함한 외교전략은 ‘체제수호를 위한 방어전략’에 ‘균형질서 회

선과 관련하여, 북한은 일정한 정도의 남북관계 개선이 전통적인 한·미관계,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소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는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정요인들을 고려하면,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촉진요인으로는 ① 남한과의 경제관계 개선이 북한의 해외자본 유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 ②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기술적·경제지리적·문화적 관점에서의 효율성, ③ 남한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적극적 자세 등이, 제약요인으로는 ① 남북한 정치·군사적 관계의 불안정성, ② 불안정한 북한의 정세 또는 불확실한 북한의 개방정책, ③ 북한의 대남한 경제의존도 심화 및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 ④ 북한 경제의 한계(북한의 낮은 대외신용도 및 외화 부족, 생산력 및 생산성의 저하로 인한 교역잠재력 저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북한 내 시장경제원리의 결여 및 투자·경영에서의 제약 등), ⑤ 미국·일본·서독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

북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전략'이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석하려는 시도로는 길정우의,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남북한 경제관계의 결정요인 및 촉진·제약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참조할 때,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남북 경제관계의 현황을 점진적으로 개선·발전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고려와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전략의 결합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은 통일이라는 지향점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경제관계의 과제를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 경제관계는 정치·군사·안보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으로 신뢰회복과 화해증진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간 정치·군사관계의 악화를 막는 '완충역할'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유도하는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남북 경제관계의 물적 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간접교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자교류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의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입장이 민간기업 중심의 교류·협력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차원의 민간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인정하여야 한다. 경제관계에서의 신뢰회복과 화해증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화는 남북

한간에 이미 합의되어 있는 「남북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제도를 성급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남북한 각자가 제도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합의문을 실천에 옮기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려는 정책이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훨씬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분야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을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북한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데 정책적 중점을 둬으로써, 북한의 대남정책이 적대적·방어적 자세에서 평화적·상호협력적 자세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방향은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하여 경제력 회생 및 정치·경제체제 안정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경제체제의 개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경제통합보다는 경제공동체 형성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통합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경제통합 문제는 한편으로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의 해소에 의한 남북 경제의 유기적 연계성의 증대와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의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은 체제통합이라는 이념적 문제와 경제력 격차 해소라는 세력균형의 문

제를 남북한 현실에 비추어 좀더 실용적으로 접근하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회복 및 정치·경제체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북한이 체제의 변화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남북 경제관계에 대한 정책기조가 민족공영의 추구라는 사실이 분명해짐에 따라, 북한은 대남적대정책을 변화시켜 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한과의 관계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민족공영을 최우선 목표로 북한의 경제력 회복에 기여하여야 하며,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은 경제교류·협력의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sup>72)</sup>

셋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경제관계 발전계획은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관련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는 정치·군사적 균형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협력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 경제교

---

72) 따라서 경제공동체 형성은 남북한 경제의 실질적 상호연관성의 증대와 이에 기초한 민족복리 증진을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류·협력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서 핵심적 영역으로 등장할 환황해권·환동해권·두만강경제권 등의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73)</sup> 이를 위해 남북한은 동북아경제에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의 결합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추진하고, 아울러 경제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7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과 동북아경제권의 관계발전에 대한 전망은 최신림, “북한과 동북아경제권의 연계가능성” (한국정치경제학회, 1995) 참조. 최신림은 경제권을 지역화와 경제통합이라는 두 개념을 통해 파악한 후, 동북아지역에서는 ‘국민경제간의 지역화 혹은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지역적 경제권’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시아 사회주의국과 주변국 사이의 국경에 걸친 지역들에 잠재된 보완관계가 냉전구조의 와해와 함께 일시에 현재화함으로써 발생한 국지적 경제권’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현단계에서 이론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지역에서도 경제통합을 지향점으로 한 지역적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제 V 장 남북 경제교류·협력 추진방안

###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기본구도

본 연구의 제Ⅱ장 및 제Ⅲ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제한된 정책변화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으며, 경제난과 주민의 체제일탈현상 증가로 인해 체제유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층이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체제 개혁을 통한 경제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비로서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모든 경제부문에 대한 'big bang'식의 체제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과 같이 시장경제운용의 경험이 없는 경제체제의 경우, 시장기구의 효율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주체의 행위패턴과 제도적 환경 확립에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사회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전면적인 생산수단의 사유화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점진적인 개혁·개방 조치로서 중소기업 허용, 가격구조 조정 및 부분적 자율화, 기업 경영자율권의 확대, 북한화폐의 평가절하, 생산단위에 대한 대외무역권 부여, 농지의 소

유권 및 경영권 분리 등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이 앞에 설명한 체제개혁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산업 부문간 불균형과, 상품 및 생산요소 유통구조의 낙후성, 제도적 환경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심각한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대한 군수산업, 생산요소 이동성의 제한, 독점적 연합기업소 체제, 광범위한 물자 부족현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공급탄성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혁과정에서 심각한 통화팽창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 및 외채상환능력의 제약과 산업불균형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개혁초기에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시도한다고 해도 경상수지의 균형유지나 화폐의 태환화는 불가능할 것이며, 오히려 통화팽창과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취약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북한이 자력으로 개혁과정에서의 거시경제적 불안정 및 갈등을 극복하고 시장지향적 개혁노선을 견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는 개혁과정에서 나타날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북한체제는 경직된 이념 및

체제로 회귀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북한은 북·미 혹은 북·일관계의 개선을 통해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북한의 체제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안정적 투자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이 경제적 실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취해 온 각종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미국기업의 북한진출은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측면을 감안, 개혁을 위한 국제정치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실리를 얻기 위해서 북·일관계 개선을 활용할 것이며, 일본에 대한 견제 및 보완적 차원에서 남한기업과의 선별적 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한편 군사적 갈등이나 서방국가에 의한 경제제재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북·중, 북·러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경분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대외경제 종사자들은 제3국을 통해 꾸준히 남한 기업인과 접촉하면서 북한에 투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남북교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남북교역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남북교역은 아직 중국 및 홍콩 등지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치적 상황변화

에 따른 변동 폭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크게 민간차원의 교역 및 투자 활동과 정부차원의 경제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부지원은 다시 민간 경제교류 지원 등 간접적인 방안과 직접적인 대북 경제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밖에 북한의 정책노선을 변화시키기 위한 소극적인 대북경제정책 수단으로서 경제제재 조치와 남북교역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북한경제의 대남경제의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 단독의 경제제재 조치는 그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간접교역에 대한 통제효과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경제관계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심화를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서 남한의 의도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과 적개심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경제교류·협력 방안은 경제제재나 남북교역의 직접적 통제 등 소극적 방안보다는 경제관계 확대 및 심화과정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북한체제의 순조로운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경협 방안은 북한이 현재의 계획경제 틀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경제정책 변화를 견지하는 단계, 부분적으로 시장기구를 도입하고 기업자율권 확대 및 농업부문 개

혁을 추진하는 단계,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장지향적 개혁정책과 소유제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구상·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계획기구 및 인센티브체계의 개선과 나진·선봉지역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현단계에서는 간접교역 등 기존의 남북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남북한간 신뢰회복에 기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경협 제도화 및 시장지향적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제교류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의 남북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주민의 거부감 배제 등 교육효과를 거두는 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부분적인 시장기구 도입 및 기업자율권 확대와 농업 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북한이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남한기업 및 정부의 투자, 그리고 남북한 합의하에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전면적인 시장기구 도입과 소유제도의 다양화 등 본격적인 경제개혁 단계에 접어들면, 남북 경제관계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개혁과정에서 나타날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북한 경제체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남한은 대북 투자와 경제지원을 통해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북한이 개혁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 및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 부분적 가격자유화 및 기업자율권 확대, 소규모 개인기업 허용, 농가책임생산제의 실험적 도입, 자유경제무역 지대와 내부경제의 연계 등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들의 적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재 및 소비재 시장의 형성 허용, 북한화폐 평가절하, 농업과 경공업위주의 투자구조 지속 등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제2단계에서 제3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2. 계획기구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단계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직·간접교역 확대와 북한의 외자유치 희망 사업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그리고 기업인 및 기술자의 방북 및 북한인사 접촉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이 현재의 체제 및 정책방향을 견지하는 동안에는 경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의 수용가능성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의 경제교류 확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대남 적개심 완화 및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 제고를 위하여 현행 남북한 교역절차를 간소화한다. 남북교역이 확대되어 남한의 반입액이 북한 수출 총액의 50%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경우(1994년 21%), 북한은 안정적 외화획득을 위해 남북교역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북한과의 합의에 의한 남북경제교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시한 외자유치 희망 사업 중 일정규모 이내의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차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한기업이 북한의 특수한 경제운영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 외자유치 경험을 통해 제도개선 및 남북경제 상호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가. 교역절차 간소화 및 제도적 장치 보완

북한이 현재의 제한적인 경제개선 정책을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남북간 신뢰구축 및 화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1994.11.8)를 확대·보완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① 특별한 제약사유가 없는 한, 북한의 초청장 혹은 입국비자를 취득한 기업인 및 경협관련 기술자의 방북을 신고제로 운용하고, ② 위탁가공교역과 관련하여 반출되는 시설재의 허가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며,

③ 일정 규모 내의 자본금 송금 및 사무소 설치 등 위탁가공 교역 및 시범적 대북투자 사업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남북교역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절감 및 위험부담 요인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교역총량을 증대시키고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 경제교류가 제3국의 仲介者에 의존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남북교역관련 통신·정보·운송·보험·금융 사업에 대한 내부적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남북교역과 관련, 기업간의 청산계정 개설 및 직교역 반출에 대한 무이자 대월자금(swing facility) 제공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74)</sup> 또한 대북한 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제도 및 해외시장 개척자금 제도를 적용하고,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10%를 5~10%로 차등적용하며, 반출에 대한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

74) 사회주의권 국가간의 교역관행에 의하면, 남북한 교역을 위한 청산계정은 양측 중앙은행에 상호개설함이 일반적이거나, 대부분의 남북교역이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용은행에 기업차원의 청산계정 설치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청산계정에 대해서는 교역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무이자 조건의 貸越限度를 설정하여 대월자금을 제공하되, 미청산잔액에 대해서는 매년말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 정산하도록 하여 대월자금의 누적적 증가를 방지한다. 동서독간의 청산계정 운용실태를 보면 1968~75년간 대월자금은 교역규모의 25%로 설정되었다.

액의 상향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단계에서 북한이 남한기업의 경쟁심리를 이용하여 일회성 지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상황을 감안, 남북경협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경협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 특수한 거래 관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도록 한다.

남북 경제교류의 제도화와 관련, 현단계에서 투자보장협정이거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을 전제로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남북한간 직·간접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초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역상품 품질유지를 위한 船積前 품질검사와 클레임처리 방법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과 동시에 북한측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합의를 유도해야 할 구체적 사항으로는 ① 무역 담당기관간에 상업용 전용회선 설치를 통해 전화, 팩스, 텔렉스, 팩스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② 船積前 품질검사를 위한 기술자 상주제도를 추진하며, ③ 제3국 중개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개설된 부산-나진 항로 이외에 포항-원산, 인천-남포를 잇는 직항로 및 문산-개성간 육로수송로 개설과

남북한 國籍船의 운항 보장, 남북한 선박 운행 및 육로수송과 관련 통신·접안·하역 방법 등에 관한 통행협정 체결 등의 사안에 대해 북측의 협의를 유도하도록 한다. 한편 필요한 경우, 남북한간 공업규격 조정 및 무역대표단 교환을 위한 협의를 추진한다.

#### 나.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북한이 경제개혁에 착수하기 전단계에서는 시범사업의 성격과 범위 및 규모를 정부가 규제하되, 나진·선봉 및 기타 합작가능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직·간접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일반투자의 경우 건당 투자 상한선을 확대하되, 필요시 투자 상한 초과를 허용하도록 한다. 현단계에서의 북한경제 상황 및 남북한 관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북한이 부품 부족으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의 투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경공업 분야의 사업목록을 요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시범적 사업을 선정하여 가동 및 정비를 위한 부품 공급 등의 방법을 통해 남한기업이 투자한다.

둘째, 남한기업이 나진·선봉지역 외자유치 희망사업에 투자를 원하며,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규모 이내의 경공업 및 인프라 건설 항목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sup>75)</sup>

셋째, 북한이 합작을 원하는 나진·선봉 이의 지역의 사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남한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며, 사업운영 성과의 평가에 따라 투자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다.<sup>76)</sup>

한편 현단계에서는 북측의 거부로 인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경제공동위원회 가동이 가능해질 때까지 남북 경제협력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기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혹은 민간 차원의 협의창구 개설에 대해 북한측과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3. 시장기구의 부분적 도입 단계

북한이 현단계 경제정책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경제난 해결을 위해 부분적인 가격자유화 및 기업자율권 확대, 소규모 개인기업 허용, 농가책임생산제의 실험적 도입,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내부경제의 연계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5)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유치 희망사업 내역은 <부록 2> 참조.

76) 북한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제출한 합작투자희망사업 목록을 합작사업 선정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부록 3> 참조).

이 단계에서는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고, 남북한 합의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시장기구 도입 및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경제효율성 제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시장기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남북교역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교역과 투자의 상호 보완성을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투자유치 희망부문 및 남북한 당사자 협의에 의해 합작 및 투자사업 항목과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남한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허용한다.

둘째, 북한이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호응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북한 및 주변국 정부와 민간기업으로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북한지역 혹은 제3국에서 천연자원 개발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 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직접투자 허용 및 확대

전략산업 등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앞 단계에서의 시범사업 대상사업 및 투자규모에 대한 정부규제를 폐지하고, 북한

전역에 있어서 남북한 양측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투자 및 합작과 기타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경제교류를 허용한다. 단지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활동 결과는 전적으로 기업이 책임지도 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성 투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구 혹은 정부 당국자간의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편의를 위한 제도정비 및 분쟁해결을 위한 남북 협의 창구 및 통신망을 개설·운영하도록 한다.

#### 나. 남북한 공동사업 추진

남북한 및 주변국가 정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은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남한주도로 기획·실행하며, 이를 위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다자간 협력을 유도하도록 한다.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원활한 생산요소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 경제의 비교우위 실현을 위하여 남한은 자본과 기술, 북한은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 및 노동력을 제공하되 상호실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평한 공동사업 관리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공동사업 항목은 사업 추진시의 투자환경 및 여건에 의해 조

절될 수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업은 현단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 ①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여 공동개발하고,<sup>77)</sup> 동 지역을 자유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며, 백두산과 나진·선봉 지역 및 평양지역의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개발한다.
- ②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협력을 위한 교통망 및 통신망을 보수·연결하되, 비교적 활용가능성이 크고 남북간 합의달성이 용이한 해운 및 항운부문부터 추진하여, 점차 막대한 투자와 시설운영상의 세부절차 확정을 필요로 하는 도로 및 철도와 통신부문으로 확대한다.
- ③ 남북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여 남북한 어민이 공동어로 조업을 실시하고 원양어업부문에서의 합작을 추진하며, 남북한이 확보한 원양어업쿼터를 공동 이용하기 위해 남한의 선박, 기술,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

77) 금강산 개발을 위해 북한의 금강산 국제그룹은 홍콩의 Raine Horne & Lau사를 용역회사로 선정하여(1992.5) 「금강산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1993.3). 동 보고서는 1994~2003년까지 10년간 북한이 금강산 일대를 종합관광지로 개발할 것과 투자유치를 위해 '금강산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초기에 기초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도합 1억 7,8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남북한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하자원 및 대륙붕의 공동개발, 전력계통의 연결, 시베리아지역의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북한 통과 가스관 설치 및 공동 원유공급선 확보를 추진한다.
- ⑤ 러시아, 중국 동북3성, 몽골 등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대한 합작투자를 통해 남한의 자본조달 및 시장판로 개척 능력과 기술, 북한의 중간재 및 물자 조달기능과 노동력을 결합함으로써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실현한다.

한편 관광부문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개발방식, 개발기간, 과실송금, 관광객유치, 통행방법 및 여행자 신변보장 등에 관한 남북간 협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어업부문 합작을 위한 안전조업과 어업분쟁 예방 및 처리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송망 및 통신망의 연결과 전력 등 에너지 자원의 교환을 위해서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남북한간의 합의도출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추진과 함께 제도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 4. 전면적 경제개혁 단계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의 남북 경제협력 방안은 누적되어 온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개혁·개방정책이 수반할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북한 경제체제 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동구국가들의 예를 보더라도 전면적 개혁 단계에서 북한은 대부분의 산업분야에 있어서 남한의 투자 및 지원을 수용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 단계에 이르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북한경제의 구조적 조정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78)</sup>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명령형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까닭에, 중공업과 군수산업 위주의 기형적 산업구조 및 비효율적 생산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설비는 낙후되어 그 제품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이 직면할 과제는 경제적 타당성에 의거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해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 있어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은 남한기업의 대북한 투자를 통해 북한이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업의 기회 제공과 상품 공급탄성 제고를 통해 실업과 통화팽창 현상 등 개혁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78) 여기에서 적극적인 의미란 북한이 시장기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제2단계의 남북경협 방안이 주로 남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북한이 전면적으로 경제개혁을 시도하는 경우, 남한 정부 및 기업이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한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에 의해 추진해야 하며,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는 남북한 상호보완성 및 비교우위 개발을 통해 남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개혁·개방 단계에서의 경제협력 사업은 남한의 일방적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구체적인 항목별 투자 방안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투자 및 지원 가능한 재원을 각 산업별로 어떤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배분하느냐 하는 점이 관건일 것이다. 다음의 분석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도되었다.

북한경제의 활성화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한 산업기반의 공고화, 선진생산기술의 도입,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생산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대체화, 지속적인 외화획득 수단의 제공에 의한 경제적 완충부문(buffer sector)의 확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sup>79)</sup> 북한의 순조로운 개혁·개방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은 공업부문 및 농·수산업부문과 생산기반시설 부문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79) 자급형 스탈린식 명령형 계획경제체제에서 경제부문간의 不均衡이 나타나는 경우, 중공업위주의 發展戰略을 택하여 농업 및 소비재부문이 완충부문(buffer sector)으로서 희생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60년대 이래 동구사회주의체제의 개혁이 시도된 이래 일반적으로 對外貿易部門이 완충부문으로 사용되었다.

### 가. 공업부문

공업분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는 북한의 산업간 연관관계에 입각한 파급효과와 국제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각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또 그 결과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호 의존관계를 갖게 되므로,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도는 중간투입률과 중간수요율의 크기에 따라 파악될 수 있다. 즉 타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s)는 중간투입율에 의해서,<sup>80)</sup> 타산업에 중간재를 판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s)는 중간수요율에 의해서 각각 측정될 수 있다.<sup>81)</sup>

80) 산업연관표를 보면 각 산업부문별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인 중간투입과 노동보수, 고정자본소모 및 세금과 기업의 이윤으로 구성되는 부가가치의 내역을 알 수 있다. 제조업에서 생산의 우회도가 높을수록 총투입액에서 중간투입액이 차지하는 중간투입률은 높아지게 된다.

$$\text{중간투입률} = \frac{\text{중간투입액}}{\text{총산출액}} \times 100$$

81)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그 용도에 따라 다른 산업의 원료로 투입되는 中間財와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最終財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산업연관표를 보면 각 산업부문별 재화나 서비스 중 중간재와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북한 공업부문의 순조로운 개혁을 위한 투자는 후방연쇄효과가 작고 전방연쇄효과가 큰 분야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개혁초기에 물자부족 현상은 여전히 북한경제의 애로로 작용할 것이므로, 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은 타산업으로부터의 중간재 구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sup>82)</sup> 반면 전방연쇄효과가 큰 분야는 많은 부분이 타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므로 북한산업의 애로를 타개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므로 최종수요재보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남한으로부터의 투자 및 지원과 국제교역 환경의 개선으로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춘 뒤 후방연쇄효과가 비교적 높은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최종재로 쓰인 양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초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부문일수록 중간수요율이 높다.

$$\text{중간수요율} = \frac{\text{중간수요액}}{\text{총수요액}} \times 100$$

82) Janos Kornai는 사회주의체제하의 정부나 기업은 軟性豫算制約(soft budget constraint)으로 인해 투자가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제1부문의 생산재 생산을 위해 제2부문의 소비재분야 역시 결핍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Janos Kornai, *The Economics of Shortage*, Vol. 1, 2 (New York: North Holland Publishing Co., 1980) 참조.

<표 5-1> 북한 제조업 부문별 중간투입율과 중간수요율

(단위: %)

구 분	중간투입율	중간수요율
광업	31	94
음식물, 농산물가공	72	23
섬 유	75	75
의 류	74	7
목재, 목재가공	18	36
화 학	64	77
유리, 세라믹	41	74
금속, 금속가공	43	75
기계	59	49
전기·전자	51	45
조선·선박수리	53	39

자료: <부록 4>를 근거로 하여 추산.

한편 전방연쇄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북한경제의 애로부문인 전력 및 연료·채광, 비료·농약, 수송·통신과 연관하여 생산 유발계수가 높은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표 5-1>은 제조업부문을 좀더 세분화하여 부문별 평균중간투입율과 평균중간수요율을 보여주고 있다.<sup>83)</sup>

83) 본 절의 분석에 사용된 1990년도 북한의 산업연관표는 중국의 1980, 1987년도 산업연관표와 북한산업의 실태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작

목재 및 목재가공, 광업, 유리 및 세라믹분야는 후방연쇄효과가 비교적 작고, 섬유·의류·음식물 및 농산물 가공분야는 비교적 큰 편이며, 금속·전기전자·기계·화학분야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전방연쇄효과는 광업·화학·섬유부문에서 비교적 크고, 조선·선박수리, 유리 및 세라믹, 금속 및 금속가공업, 기계·전기전자 부문은 중간 정도이며, 목재 및 목재가공, 음식 및 농산물가공, 의류부문에서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북한의 産業隘路와 연관된 각 지원분야의 생산유발계수를 들 수 있다.<sup>84)</sup>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북한산업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석탄·전력·비료·농약·교통설비·발전설비·원동기부문에 대한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조사하여 큰 순서부터 배열하면 <표 5-2>와 같다.

여기에서 북한산업의 주요 애로부문에 대한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체로 기계·화학·금속 및 금속가공분야의

---

성한 것이다(<부록 4>).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국의 산업간 연관성을 참고로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아시아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은 경제개발정책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왔으므로 상호 유사한 상대가격 구조 및 부가가치 구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생산요소의 代替彈性이 낮으므로 산업연관계수가 유사하다. 셋째, 사회주의경제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원자재, 사회간접자본 등이 성장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산업연관계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84) 산업연관분석에서의 生産誘發係數란 한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생산이 필수적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후방 연쇄효과와 북한경제의 애로부문 해소를 위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개혁·개방단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있어서는 광업·기계·화학·전기전자, 금속 및 금속가공, 섬유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 북한의 산업 애로분야에 대한 주요 중간재

생산유발 계수 순위	북한산업의 애로분야				
	석 탄	전 력	비료·농약	교통설비	발전설비
1	기 계	화 학	화 학	기 계	기 계
2	화 학	금 속	기 계	화 학	화 학
3	목 재	광 업	광 업	금 속	금 속

출처: <부록 4>를 근거로 추산.

한편 북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공업분야에 대한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보완할 수 있다. 북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무역상대국이 발표한 무역통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OECD의 1988~1990년 대 북한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북한의 제조업부문의 업종별 국제경쟁력계수에 의거하여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분석

해 보기로 한다.<sup>85)</sup>

<표 5-3>은 비철금속(1차제품) 및 의류가 輸出特化部門이며 신발 등은 수출우위부문, 그리고 자동차·산업기계·기기·조선·석유화학·금속·섬유·산업용전자 등은 輸入特化部門임을 보여 준다. 북한의 외환 부족을 감안하면 수출특화부문과 수입특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의류 등 수출특화부문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외화 획득에 기여할 것이고,<sup>86)</sup> 수입특화부문에 대한 투자는 수입대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환 애로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85) 貿易特化指數는  $(i\text{품목의 수출액} - i\text{품목의 수입액}) \div (i\text{품목의 수출액} + i\text{품목의 수입액})$ 으로 정의되며, 평균치가 0.7이상은 輸出特化, 0.0~0.7은 수출우위, 그리고 0.0~-0.7은 수입우위, -0.7이하는 輸入特化로 구분했다. 1991년 이후 북한의 무역관련 통계는 비정상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비교우위를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199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의 타당성이 높을 것이다.

86)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저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조총련계 기업의 투자와 서방기업들의 임가공 생산주문에 의한 의류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의류수출은 의류생산용 섬유사, 직물, 의류장식품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류산업의 후방연쇄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북한의 외환부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5-3〉 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지수

구분	업종	1988	1989	1990
수출 특화	비철금속(1차제품)	0.89	0.86	0.93
	의류	0.59	0.73	0.87
수출 우위	신발	0.50	0.64	0.54
	강철(1차제품)	0.31	0.53	-0.06
	사무용기계	0.11	-0.30	0.67
수입 우위	완구	0.00	-0.41	-0.46
	요업	-0.83	-0.58	-0.04
	전자부품	-0.60	-0.68	-0.27
	악기	-0.68	-0.78	-0.31
	가죽, 가죽제품	-0.52	-0.74	-0.65
	정밀화학	-0.69	-0.77	-0.51
	가전제품	-0.79	-0.77	-0.51
수입 특화	산업용 전자	-0.59	-0.97	-0.84
	섬유	-0.78	-0.81	-0.88
	금속제품	-0.94	-0.85	-0.81
	목재, 목재제품	-0.98	-0.89	-0.88
	산업용 전기	-0.91	-0.94	-0.91
	고무, 고무제품	-0.95	-0.88	-0.95
	석유화학	-0.90	-0.96	-0.93
	공작기계	-0.96	-0.96	-0.91
	정밀기기	-0.96	-0.96	-0.95
	조선	-1.00	-0.95	-0.92
	종이, 종이제품	-0.96	-0.98	-0.98
	산업기계	-0.99	-0.99	-0.99
	자동차	-0.99	-0.99	-0.99

출처: 산업연구원, 「북한의 주요산업 분석」, 연구보고서 제254호 (1992), p. 23.

앞의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개혁·개방 단계에 있어서 남한정부 및 기업의 대북투자는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초기에 정부와 기업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장기적 사업계획에 의해 투자하는 경우 북한산업간 전·후방 연쇄효과 및 주요 애로부문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를 기준으로 대북투자 방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민간기업의 단기성 투자는 수출특화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개혁·개방 과정의 북한 내수시장 확보를 투자목표로 하는 경우, 북한경제의 수입특화부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 나. 농·수산업부문

북한경제에 있어서 농·수산업부문은 북한 취업인구의 34%, 국민총생산의 22%에 달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타산업분야에 대한 원자재의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단계에서 식량을 포함한 구조적 물자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업부문에 대한 투자 유도가 절박한 과제이다.

북한농업의 실태를 감안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농약과 비료 및 농기계 생산설비, 수송 및 저장 장비, 영농기술 보급 등의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sup>87)</sup>

특히 농업부문의 직접 투입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학 및 경공업 분야의 관련 항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표 5-4>).

<표 5-4> 북한 농·어업 직접투입계수

산업분야	농업	어업
농업	0.201024	0.072224
어업	-	0.033201
전력공업	0.002876	0.001622
연료·채광	0.002941	0.000394
야금공업	0.006583	0.002542
기계·금속	0.016393	0.017177
화학·섬유	0.061083	0.054990
건설재료	0.001131	0.003025
임업목재	0.005362	0.012232
경공업	0.042832	0.032371
식료공업	0.005911	0.032613
수송통신	0.005144	0.011062
상업·기타	0.010669	0.035366

자료: <부록 4>를 근거로 추산.

- 87) 농업생산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수리화·기계화·화학화·전기화에 있어서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수리화에 있어서 남북한이 비슷하며, 기계화에 있어서는 품질과 다양성면에서 남한이 앞서 있으며, 화학화에 있어서도 북한이 단위면적당 더 많은 양의 비료를 쓰고 있으나(1991년 현재 정보당 화학비료소비량 1.8톤) 품질차이를 감안한 성분함량기준으로 볼 때 정보당 施肥量은 남한이 더 많다.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남한의 고품질 비료와 농약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수산업은 광업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요 外貨 可得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어선 및 어로장비의 노후와 어로기술 낙후, 어선용 유류부족 등의 문제와 수송수단의 낙후, 냉동·냉장 및 가공시설의 부족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참고하면, <표 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업분야의 증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물 등 어로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화학섬유제품, 냉동·냉장 및 포장·가공설비, 어로용 동력장비 및 수송수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 수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어로장비 및 관련 시설의 改修 및 수송수단과 냉동·냉장 및 가공설비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sup>88)</sup>

---

88) 산업연관표에서 직접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생산기술구조, 즉 투입과 산출의 함수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투입계수는 이론적으로 물량단위의 거래표로부터 산출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표시된 거래표로부터 산출한다. 예를 들어 <표 5-4>의 제7행을 보면, 북한에서 농업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섬유부문의 생산물 0.061083단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업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섬유생산물 0.054990단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어로효율 제고를 위한 어로장비와 어선에 대한 설비지원은 공업분야의 조선·선박수리부문에 대한 지원과 연관지어서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생산기반시설 부문

개혁·개방 단계의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불가결하며, 북한의 현상황에 비추어 그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남한기업은 우선적으로 투자대상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투자사업과 관련된 철도·도로·통신망의 연결 및 확충, 연료·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주택·문화시설의 확충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생산기반시설 분야의 지원은 장기적·지속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기타 분야 대북투자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북한의 개방·개혁 과정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로서 전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분석해 보면, 생산기반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는 전력공업, 연료·채광, 야금, 기계·금속, 건설재료 등의 분야이다(<표 5-2> 참조).

대체로 투자항목 중에서 화학 및 섬유 부문은 전력공업과 수송·통신부문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높고, 금속 및 금속가공업은 전력공업과 연료·채광 및 수송·통신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모두 높으며, 전기·전자 및 기계 분야는 전력공업과 수송·통신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단계에서의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와

같은 산업간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력공급부문에 대해서는 우선 전력공급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지형적 여건에 따라 중소형 수력발전용 설비 또는 건설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소규모의 화력발전용 설비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전력공급을 원활히 한다. 발전시설 건설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합작투자 형식을 빌어 북한이 건설 중이나 원자재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발전소에 발전설비 등 원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전력공급원은 존재하나 송·배전 설비의 낙후 및 주변산업의 에너지 낭비현상으로 전력 유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에는 합작투자를 통해 송·배전 설비의 교체와 신설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더하여 연료·채광분야의 합작사업을 통해 현대적 채광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채탄산업의 작업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석탄 수송을 위해 철도·도로망을 생산공장과 연결시킨다. 연료·채광분야의 생산증가를 위해서는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탄광의 전력 송·배전 설비에 대해 투자를 유도하도록 한다. 수송망 부문의 투자는 생산설비와 기존의 철도·도로망과의 연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존설비가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합작투자를 통해 철도전철화 및 철로의 광궤화를 위한 설비와 기관차·화차·컨테이너·트럭 등 수송수

단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생산공장의 효율을 제고하도록 한다.

통신설비부문 투자를 통해 경제협력 사업관련 통신망의 국제화 및 시설개수를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수송·통신망 확충을 위한 투자는 북한의 현지 실정을 감안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 남북한의 수송·통신체계가 무리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사전작업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해당사업계획 중 남북간 수송·통신망 연결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전력, 연료·채광, 수송·통신분야는 서로 밀접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지역에서의 투자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세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제VI장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북한경제 현황과 체제변화 전망 및 남북경제 관계 추이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체제의 순조로운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 경제교류·협력 방안의 틀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아직 본격적인 시장지향적 개혁노선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제한된 경제정책 변화만으로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경제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개혁 노선을 택하더라도, 거시경제적 부작용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기본방향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개혁과정에서의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지원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구도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방안은 북한경제 개혁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이는 그동안 남한 내에서 거론되어 온 남북경협 방안이 주로 일방적인 통일구도에 맞추어 제시되었던 데 비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전면적인 시장지향적 개혁에 착수하기 이전에는 제한적인 경제정책 변화와 시장기구의 부분적인 도입을 통해 경제회복을 시도할 것이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

정부나 기업의 본격적인 대북투자는 불가능할 뿐더러 투자여건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단계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남북교역 확대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및 제도보완, 그리고 북측이 수용할 수 있는 시범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고 상호 신뢰회복 및 적개심 해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교역의 확대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경제관계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할 것이며, 시장기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적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북한경제 개혁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적인 시장기구의 도입과 기타 경제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북한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남한기업의 투자 가능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북한당국이 시장기구 확대의 효율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북 투자 범위 및 규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북한이 합의하는 경우 남북 공동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개혁 단계에 진입하지 않는 한 북한의 의구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성 대북 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면적인 시장지향적 개혁·개방 과정에서 남한은 다양한 투자 형식을 통해 남북한경제의 산업구조 조정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북한의 시장지향적 경제개혁과 개방

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자체성장을 유도하고 남한의 투자 및 지원과정에서 남북한 경제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북한의 순조로운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공업부문의 대북 투자 우선순위는 북한 산업간의 연관관계와 국제비교우위, 그리고 구조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산업연관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전방연쇄효과가 큰 부문에서부터 후방연쇄효과가 큰 부문으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비교우위의 관점에서 평가할 경우, 북한경제의 외화 부족현상을 감안하여, 수출특화부문과 수입특화부문이 우선적인 투자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산업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미루어 볼 때, 애로부문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가장 큰 부문부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투자목적에 따라 적절한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의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개혁·개방 단계에서는 북한 농·수산업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농업용 공업제품 생산분야 및 수산업 설비 확충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미비는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사업의 사업 여건 마련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수산업부문이나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단기적 수익성 보다는 장기적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부문이므로, 이들 부문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가 부족할 경우, 정부 및 민간기업 혹은 국제기구 등의 콘소시엄을 형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남북 경협 방향은 남북한경제에 실물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으로서는 경제협력 방안의 경제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북한 경제협력을 화해·불가침·사회문화 등 남북관계 전반의 진전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화해·협력체제」 구축 → 「남북연합」 →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대북 투자 및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송·통신망이 연결되어야 할 것인 바, 북한이 개혁·개방에 착수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꾸준히 남북간 철도·도로의 연결 및 해로 개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경협과정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물자교류·합작투자·자원공동개발 등 주제별로 이행·실천문제가 논의될 것인 바, 이를 위해 경제교류·협력공동위 산하에 주제별 실무추진소위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전조사·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전담하는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조사·분석활동이 우리측의 정보 획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 경협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북한이 남한정부에 경제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경제지원의 구체적 형태는 ① 지원규모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정부차원에서 이전적 지출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자본 지원, ② 지원계획안에 따라 생산설비와 원자재 등 현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별된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경제지원 목적의 정확한 수행과 남한산업에 대한 유효수요 증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물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물지원시 특히 유의할 점은 남한경제의 물가 및 물자수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현물지원은 원칙적으로 현물차관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나 상환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지원사업이 이윤을 남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윤의 적정비율을 차관상환 형식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경제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심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경제체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남북경제관계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가능한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반입을 원하는 물품에 대해 특별청산계정 및 무이자 대월자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무역의 대남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상품의 대외수출관로 개척을 대행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분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지속적 기술흡수를 돕기 위해 제3국에 서의 북한인력 기술교육 체계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속적인 경제관계 유지와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사업의 소요부품 조달과 공급체계가 북한산업과 밀접히 연계되도록 하며, 원자재 공급확보를 위해 북한의 지방행정단위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측 당사자와 부품조달 및 원자재 수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품 및 원자재수급에 대해 명문화된 약정은 경제지원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인 동시에 대북 경제협력 대상 분야와 북한경

제 전반과 연계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다섯째, 남북 경제협력 실행 과정에서는 경제교류·협력 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알선을 위해 서울·평양에 「경제대표부」 교환설치를 타결하는 한편,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통상협정」, 투자 및 과실송금을 보장하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어족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남북공동어로협정」 등 각종 세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 <부록 1> 비교정태분석 결과 도출의 예

예를 들면, 노동 인센티브  $W$ 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N$ 의 변화방향은 크레이머 법칙(Cramer's rule)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부문 초과수요 관계식의 자코비안 행렬식(Jacobian determinant):

$$J = \begin{vmatrix} \partial F_1/\partial N & \cdots & \partial F_1/\partial B \\ \cdot & \cdot & \cdot \\ \partial F_4/\partial N & \cdots & \partial F_4/\partial B \end{vmatrix} = \begin{vmatrix} 1 & 0 & -N_{Ec} & 0 \\ -Y_N & -1 & C_{Ec} & 0 \\ kY_N & 0 & -1 & 0 \\ 0 & 0 & 0 & 1 \end{vmatrix} = 1 - kY_N N_{Ec} > 0$$

우선 벡터(vector)  $F_w$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식(9)~(12)를 이용하여  $W$ 의 변화에 따른 부문별 반응을 구한다.

$$F_w = \begin{pmatrix} \partial F_1/\partial W \\ \partial F_4/\partial W \end{pmatrix} = \begin{pmatrix} N \\ -C \\ 0 \\ 0 \end{pmatrix}$$

이 결과를 자코비안 행렬식의 제1열에 대입한 후( $|J_{Nw}|$ ) 解를 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곧 경제이론에 의한 노동공급 변화방향과 일치하는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N/dW = |J_{Nw}|/|J| = N/J > 0$$

<부록 2> 나진·선봉지역 외국인투자 유치희망 프로젝트 리스트

인프라부문: (단위: 萬 달러)

사 업 명	투자분야	프로젝트규모	총투자액	투자 방식
1 나진항 확장	항만부문	5,000만톤/년 (그중 컨테이너 500만 TEU/년)	152,000	합작 합영
2 청진서항 확장	항만부문	1,000만톤/년	13,500	합영
3 선봉항 확장	철도부문	1,000만톤/년	150	합작
4 회령-학송 철도전기화	철도부문	전기화 연장: 168.2km	5,994	합작
5 구룡평-조산리 광궤 신설	철도부문	철로연장: 13.4km	2,640	합작
6 두만강 복선 철교 신설	철도부문	다리연장: 590m	1,420	합작
7 나진역 확장	철도부문	구내선: 12km	361	합작
8 두만강역 구내자동화	철도부문	신호장치 및 역 운영자동화	1,960	합작
9 청진-두만강 통신현대화	철도부문	연장: 129km 역수: 30개역	3,437	합작
10 나진-셋별 (고속도로)	도로부문	건설연장: 73km, 도로너비: 19~20m, 화물통과능력: 1,200~1,500만톤/년	10,340	합영
11 청진-회령 (고속도로)	도로부문	건설길이: 82km, 도로너비: 19m 화물통과능력: 1,200~1,300만톤/년	8,480	합영
12 나진-두만강 (고속도로)	도로부문	총연장: 45km (중첩: 7km, 건설: 8km) 도로너비(중첩구간: 24m, 건설구간: 19m) 화물통과능력: 1,200~1,500만톤/년	920	합영

	사 업 명	투자분야	프로젝트규모	총투자액	투자 방식
13	청진-나진 (고속도로)	도로부문	건설연장: 67km, 도로너비: 19m 화물통과능력: 1,200~1,300만톤/년	9,370	합작
14	셋별-남양 (고속도로)	도로부문	노선연장: 43km, 도로너비: 19m 화물통과능력: 1,200~300만톤/년	4,600	합영
15	하여평-원정 (고속도로)	도로부문	노선연장: 7km, 도로너비: 19m 화물통과능력: 1,200~1,300만톤/년	940	합영
16	선봉공항 신설	항공부문	여객수송량: 2,000만명/년 화물수송능력: 250만톤/년 총부지: 870만 <sup>2</sup>	72,856.3	합영 합작
17	나진통신 센터	통신부문	건설부지: 2만5천 <sup>2</sup> 연건축면적: 1만1천 <sup>2</sup> 교환능력: 4만회선	4,090.4	합작
18	위성통신지 구국, 통신 분국 신설	통신부문	건물면적: 4,800만 <sup>2</sup> ×4 교환능력: 14만 7,800회선 (선봉, 응상, 후창, 나진 일대)	14,766	합작
19	선봉화력발 전소 확장	전력부문	발전능력: 총 40만kw로 증가	16,000	합작
20	안주-신해 관광지 개발	관광부문	개발면적: 2,600만 <sup>2</sup>	5,900	합작
21	우암-굴포 관광지 개발	관광부문	개발면적: 7,800만 <sup>2</sup>	2,300	합작 합영 단독 투자
22	나진-선봉 개발촉진센터	관광부문	부지면적: 1만 <sup>2</sup> 연건평: 2만 8,000 <sup>2</sup> 층수: 18층	460	합작
23	나진호텔	관광부문	수용능력: 200석 총부지: 1만 7,000 <sup>2</sup> 연건축면적: 9,710 <sup>2</sup>	100	합작

공업부문:

사 업 명	위 치	생 산 규 모	업 종	총 투 자 액	투 자 방 식	
1	피복공장	청계지구 (나진)	여성의류 14만착	섬유, 의복	210	합영, 합작
2	피복공장		잠바 150만착 솜옷 200만착	섬유, 의복	2,140	합영, 합작
3	피복공장		코트 100만착	섬유, 의복	860	합영, 합작
4	피복공장		털외투 100만개	섬유, 의복	1,930	합영, 합작
5	편직공장	신흥지구 (나진)	셔츠 5,000만개	섬유, 의복	2,980	합영, 합작
6	양말공장		양말바지 1,500만개	섬유, 의복	800	합영, 합작
7	양말공장		양말 100만켤레	섬유, 의복	45	합영, 합작
8	타올공장		타올류 700만개	섬유, 의복	430	합영, 합작
9	자크공장		점착자크 300만m	기타제조	1,45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0	자크공장		수지자크 300만m	기타제조	32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1	수예품 공장	15만개	섬유, 의복	2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2	운동화신 발공장	동명지구 (나진)	운동화신발 300만켤레	신발	33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3	신발공장		사출신발 300만켤레	신발	35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4	구두공장		가죽구두 100만켤레	신발	17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5	청량음료 공장	선봉군 선봉읍	맥주 10만kl	음, 식료품	5,600	합영, 합작

	사업명	위치	생산규모	업종	총투자액	투자방식
16	고기가공 공장	선봉군 사회리	고기가공 3만톤	음, 식료품	1,7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17	채소가공 공장	나진시 안주동	채소가공 1만톤	음, 식료품	1,100	합영, 합작
18	샘물가공 공장	선봉군 백학리	샘물 5만kl	음, 식료품	190	합영, 합작
19	국수공장	후창 지구 (나진)	국수 1만톤	음, 식료품	71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0	콩기름 공장		콩기름 2만톤	음, 식료품	1,5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1	곡산공장		강냉이 10만톤가공	음, 식료품	5,6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2	수산물 가공공장	나진시 안주동	수산물 2,500톤	음, 식료품	170	합영, 합작
23	보석가공 공장		보석가공 6만개	기타제조	1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4	완구공장	신흥 지구 (나진)	완구 300만개	기타제조	4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5	가방공장		가방 40만개	가죽	26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6	우산공장		우산 50만개	기타제조	21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7	가정용냉 동기공장		냉동기 20만대	전기, 전자	3,3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8	재봉기 공장	백학 지구 (선봉)	재봉기 10만대	일반기계	4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29	전자계산 기공장		전자계산기 50만대	정밀기계	2,3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0	인쇄기판 공장		10만m <sup>2</sup>	일반기계	9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1	고성기 공장		고성기 450만개	전기, 전자	1,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사업명	위치	생산규모	업종	총투자액	투자방식
32	수치제어 공장	백학 지구 (선봉)	7,000대 공장기계용: 6천대 로봇용: 1천대	정밀기계	5,9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3	수상관공 장(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관 250만개	전기, 전자	19,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4	공장 (천연색)		TV 200만대	전기, 전자	15,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5	녹화기 공장 (VTR)	백학 지구 (선봉)	녹화기 30만대	전기, 전자	5,4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6	녹음기 공장		녹음기 100만대	전기, 전자	5,8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7	전자시계 공장		시계 100만개	정밀기계	84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8	전자부품 공장		탄소피막저항기 10억개	전기, 전자	1,1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39	전자부품 공장		금속피막저항기 2억개	전기, 전자	7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0	전자부품 공장		수지축전기 1억개	전기, 전자	6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1	전자부품 공장		사기축전기 3억개	전기, 전자	1,300	합영, 합작
42	전자부품 공장		전해축전기 3억개	전기, 전자	1,400	합영, 합작
43	반도체 공장 (천연색)		반도체 2억개	전기, 전자	4,8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4	집적회로 공장		집적회로 1억개	전기, 전자	22,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5	액정표시 소자공장	소자 3,000만개	전기, 전자	420	합영, 합작 단독투자	

	사 업 명	위 치	생산규모	업 종	총투자액	투자방식
46	전구공장	신흥지구 (나진)	전구 1억1천만개	전기, 전자	8,3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7	건전지 공장	후창 지구 (나진)	건전지 500만개	전기, 전자	340	합영, 합작
48	통신기계 공장	백학 지구 (선봉)	전자식자동교환기 10만회선	전기, 전자	5,7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49	수자조정 공작기계 공장	후창 지구 (나진)	공작기계 1천대	정밀기계	5,5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50	전동기 공장		소형 및 중형전동 기 15만대	일반기계	1,100	합영, 합작
51	전기기구 공장		전기기구 300만개 교류접촉기 등	전기, 전자	870	합영, 합작
52	자동차부 속품공장	창평 지구 (나진)	화물 및 승용자동 차 부속 1,000톤	수송기계	1,100	합영, 합작
53	극소형 전동기 공장	후창 지구 (나진)	전동기 10만대	일반기계	3,000	합영, 합작
54	배수리 공장	창평 지구 (나진)	대형 짐배 80척	수송기계	1,000	합작
55	배해체 공장		10척/년	수송기계	450	합작
56	포장재 공장	웅상 지구 (선봉)	나무포장재 1천만개	목재	6,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57	고순도 시약공장	관곡 지구 (나진)	시약 1,000톤	화학	4,000	합영, 합작
58	가구공장	웅상 지구 (선봉)	가구 3만점 건구 10만m <sup>2</sup>	목재	330	합영, 합작
59	깔판공장		깔판 15,000m <sup>2</sup>	목재, 제지	160	합작
60	보은재 공장		보은재 3,000톤	화학	100	합영, 합작

	사 업 명	위 치	생산규모	업 종	총투자액	투자방식
61	포장재 공장	관곡 지구 (나진)	종이합 1천만개 수지포장재 1천만개	제지	550	합영, 합작 단독투자
62	과즙수 공장	신흥 지구 (나진)	과즙수 1만kl	음, 식료품	600	합영, 합작
63	자동차 조립공장	홍의 지구 (선봉)	화물차 5만대 8~10톤급 이상	수송기계	38,000	합영, 합작
64	도자기 공장	선봉군 선봉읍	유리그릇 800만개	비금속광물	1,700	합영
65	상표인쇄 공장	신흥 지구 (나진)	3,000만매	인쇄	400	합영, 합작
66	오토바이 공장	홍의 지구 (선봉)	오토바이 10만대	수송기계	10,000	합영, 합작 단독투자
67	짐함 공장 (컨테이너)	청진시 송평 구역 월포리	짐함 1만개	일반기계	1,140	합영
68	원유가공 공장	나진시 관곡동	원유가공 200만톤	화학	150,000	합영, 합작

출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나진-선봉 투자대상안내」 (1993). 배종렬, “접경 3국 개발계획간의 일관성 분석,” 김익수 편,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에 대한 분야별 평가」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 130~135에서 재인용.

<부록 3> UNIDO에 제출한 북한 합작투자 유치 희망사업 내역

No	프로젝트명	연간계획생산규모	수출 비율	건물	기계 설비	유동 자금	기타	투자 소요액
18	은성동광산	(신규) 600만톤	50		21.2			21.2
21	단천흑연생산	(확장) 2만5천톤	100		5.1	1.7		6.8
25	해주대리석, 화강암	(확장) 대리석 50만톤, 화강암 100만톤	80		10	1		11
30	청단흑연광산	(확장) 2만5천톤	100		5.9	1.7		7.6
68	인상흑연광산	(신규 및 확장) 2만5천톤	100		4.07	1.2		5.27
17	만청간강식공장	(신규) 5천톤	70		4	1.2	0.1	5.3
23	평양수산물 가공공장	(신규) 5만톤	90		7	1.2		8.2
70	콩기름정제 공장	(신규) 콩기름 8천 톤, 두부 3만5천톤	10		5	4.5		9.5
86	블루베리주 스합작생산	(신규) 2만톤	100		1.8	1.4		3.2
3	안주실크공장	(신규) 1천만톤	70		36	2.72		38.72
10	평양실크 니트웨어	(확장) 니트웨어 1백만벌	50		3	0.5		3.5
11	평양섬유신 발공장	(확장) 섬유신발 2백만족	50		5	1		6
33	울곡동의류 공장	(확장) 양복 20만벌, 셔츠 100만벌	100		3	0.5		3.5
77	나일론공장	(신규) 나일론실 크사 2천5백톤	100		20	4.23		24.23
81	인조섬유생산	(확장 및 현대화) 1만톤	?		90	9.18		99.18
82	테트론공장	(신규) 테트론 스테인폴 5천톤	?		70	6.21		76.21
34	용기합판회사	(신규) 합판 50만M <sup>2</sup> 목재 7천M <sup>3</sup>	50		2.5	0.21	0.081	2.791

2	평천아철산	(신규) 바륨 3천톤, 망간-아연 4백톤	50		4.6	0.36		4.96
12	평양화학공장	(확장 및 현대화) 5백만개	50		0.7	2.5	1	4.2
16	만청정제유공장	(신규) 200Kg	70		0.5	0.1		0.6
69	구연산합성생산	(신규) 2천톤	30					1.922
74	스틸렌공장	(신규) 6천톤	50		2.5	1.26		3.76
75	염화비닐공장	(신규) 20만톤	100		42	26.84		68.84
76	크실렌분리공장	(신규) 에틸벤젠 3천톤	0		11.4	4.6		16
78	폴리비닐알콜판공장	(신규) 1만톤	70		10	4.84		14.84
79	가성소다	(확장) 20만톤	50					44.4
80	폴리폼알데히드공장	(확장) 1만톤	70		13	3.32		16.32
83	무수프탈산공장	(신규) 1만 2천톤	50		3	1.5		4.5
24	회령고령토	(확장) 5만톤	80		3	1.3		4.3
26	길주규조토	(확장 및 현대화) 5만톤	50		1.5	1.2		2.7
27	대동점토	(확장 및 현대화) 5만톤	80		1.5	0.9		2.423
28	장산편암토	(확장 및 현대화) 5만톤	80		3	1.2		4.218
29	경성벤토나이트	(확장) 5만톤	50		1.5	0.9		2.421
37	남포유리관유리	(신규) 관유리 1천5백톤	80		1.9	0.3	0.7	2.991
41	평양실리콘공장	(확장) 40톤	60		18	1.5	1.8	21.3

4	문천전기연 제련소	(확장 및 현대화) 전기납아연 12만톤	60	27.2			27.2	
5	강서티타늄	(신규) 2만톤	90	5	2	2	9	
6	부령크롬강 공장	(확장) 2만5천톤	50	5	1		6	
8	단천마그네샤 크리커공장	(신규) 20만톤	100	10	2		12	
14	천리마압연	(확장) 1만톤	50	3	1		4	
15	남포전기동 제련	(신규) 전기동 6만톤	80	8	1.5		9.5	
35	동림회토분 리공장	(확장) 회토산 화물 70톤	90	10	1.8	0.1	11.9	
52	마그네시아 내화물생산 공장	(신규) 20만톤	100	4.14	0.6		4.74	
55	전기로의 불 순물처리공장	(확장) 불순물 700만톤 처리	?	1.94	0.46	1.03	3.43	
56	페로티타늄	(현대화) 1천5백만톤	55~ 65	0.37 3	0.5	0.001	0.884	
72	마그네슘공장	(신규) 5천톤	90	20	2	1	23	
73	콜롬브석 정광소	(신규) 500만톤	90	2	0.2	0.5	2.7	
53	보울트 너트	(확장) 1,230톤	80	0.21	0.27	0.18	0.66	
7	만경대기계 공구	(신규) 1,000pcs/t	50	4	1		5	
9	낙원유압기 공장	(확장) 4만대	50	10	2	0.2	12.2	
38	사리원 연삭공구공장	(신규) 연마석 1만톤	50	8.7	4.71	1	14.41	
39	운산공구공장	(확장) 고탍금강 플레이크 200만개	50	6	8	1.2	0.5	15.7
40	산업용 재 봉틀	(확장 및 현대 화) 5만대	70	24.8	3.5	0.5	28.8	

51	만경대화염 절삭기	(신규) 수치제어 디지털전해 500대	50		8	1.2	0.25	9.45
84	유압기계공장	(신규) 유압기 계 30만대	70		22.5	11.55		34.03
85	디젤엔진연 료펌프 및 분사기	(신규) 디젤엔진 연료펌프 10만대	70		29.8	7.27		37.07
1	평천배터리 공장	(확장) 100만개	60		3	0.6	0.6	4.2
13	사동흑백TV 공장	(신규) 30만대	40		4	1.3		5.3
31	평양전자기기	(신규) 200만개	50		7.8	2	0.7	10.5
32	평양전기모터	(확장) 일반기 계모터 18만대	50		7	2	0.6	9.6
36	남포차폐전극	(신규) 6천톤	40		2.2	0.7	1.1	4
42	평양컬러TV 공장	(확장) 20인치 25만대, 24인치 5만대	30		16.5	0.6	1	18.1
43	회토영구 Magnet	(신규)MM-Co magnet 1.5	90		4.6			4.6
44	초소형 계전기	(신규) 120만대	50		6.838	0.6	0.2	7.638
45	탄탈전해축 전기	(신규) 400만개	50	4	0.2			4.2
46	전자손목시계	(신규) 50만개	50	1.55	0.35		0.01	1.91
47	다양한변압 기, 편향코일	(신규) 80만대	80		1.16	0.25		1.41
48	알루미늄전 해축전기	(확장) 500만대	60		5	0.13		5.13
54	인조흑연전극	(신규) 3만톤	50		21.33	12.38	4.7	40.41
57	전자컴퓨터	(신규) 소형 컴퓨터 2만대	60	6	30	1.2		31.2
58	디지털제어기	(신규) 2,000대	70		5.5	1		6.5

59	녹음기	(신규) 20만대	80		8.79	6		14.79
60	세라믹축전기	(확장) 1억개	60		3	0.61	0.6	4.2
61	금속실리콘· 고순도실리콘 공장	(신규) 금속 실리콘 400만톤	60		25.5	16	2	43.5
62	계산기	(신규) 50만대	50		0.45	0.2	0.1	0.75
63	카본필름 저항기	(신규) 2억5천만개	50		6.2	0.36		60.56
64	발광소재	(신규) 4백만pcs	90		8	0.25		8.25
65	가정용냉장고	(확장) 2만대	50		1.53	0.62		2.15
66	광전코드 변환기	(신규) 2만대	50		1.82	0.48		2.30
67	집적회로	(확장) 4백만개	50		9	0.8	0.1	9.9
71	엘리베이터 제작	(확장) 5백unit	50		10.4		2.3	12.7
22	신포조선소	(확장 및 현대화) 40척	75		14	1		15
19	나진조선소	(확장 및 현대화) 선박 120척 수리	75	20.8	64.3		0.31	85.4

주: No는 UNIDO Project No를 가리킴.

출처: UNIDO Beijing Centre, *List of Project Profiles from the DPRK* (Beijing: UNIDO Beijing Centre, 1990)를 근거로 작성.

## &lt;부록 4-1&gt; 1990년도 북한의 산업별 생산액 추계

(단위: %, 억 달러)

항 목	비 율	생 산 액	
1	농 업	18.81	42.89
2	어 업	2.19	4.99
3	전력공업	0.58	1.32
4	연료채굴	1.60	3.65
5	야금공업	7.44	16.96
6	기계금속	13.22	30.14
7	화학섬유	4.67	10.65
8	건설재료	4.13	9.42
9	임업목재	0.97	2.21
10	경공업	7.73	17.62
11	식료공업	4.71	10.74
12	기타공업	3.55	8.09
13	건설업	13.20	30.10
14	수송통신	2.40	5.47
15	상업기타	14.80	33.74
총 계		100.00	228.00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1989~90년 북한경제개관」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의 자료를 근거로 재분류 및 재구성.

<부록 4-2> 북한산업의 직접투입계수

항 목	농 업	어 업	진력 공업	연료 채광	야금 공업	기계 금속	화학 섬유	건설 재료	임업 목재	경공업	식료 공업	기타 공업	건설업	수송 통신	상업 기타
1. 농업	0.2010	0.0722	0.0139	0.0206	0.0214	0.0270	0.0340	0.0353	0.0123	0.1389	0.6240	0.2461	0.1260	0.0074	0.0384
2. 어업	-	0.0332	-	-	-	-	-	-	-	-	0.0034	-	-	-	-
3. 진력 공업	0.0029	0.0016	-	0.0700	0.0735	0.0203	0.0412	0.0812	0.0124	0.0115	0.0026	0.0604	0.0096	0.0069	0.0085
4. 연료 채광	0.0029	0.0004	0.1244	0.0442	0.0491	0.0080	0.0190	0.0829	0.0062	0.0050	0.0022	0.0098	0.0040	0.0166	0.0033
5. 야금 공업	0.0066	0.0025	0.0049	0.0353	0.3204	0.2071	0.0144	0.0414	0.0199	0.0032	0.0007	0.0062	0.0881	0.0091	0.0014
6. 기계 금속	0.0164	0.0172	0.0241	0.0793	0.0546	0.1405	0.0149	0.0575	0.0352	0.0039	0.0044	0.0157	0.1095	0.0384	0.0384
7. 화학 섬유	0.0611	0.0550	0.0683	0.0297	0.0170	0.0777	0.2641	0.0595	0.0497	0.0337	0.0045	0.0838	0.0446	0.1363	0.0581
8. 건설 재료	0.0011	0.0030	0.0007	0.0152	0.0140	0.0069	0.0048	0.0450	0.0039	0.0012	0.0004	0.0082	0.1922	0.0018	0.0059
9. 임업 목재	0.0054	0.0122	0.0003	0.0448	0.0014	0.0128	0.0359	0.0049	0.1987	0.0115	0.0024	0.0245	0.0455	0.0052	0.0218
10. 경 공업	0.0428	0.0324	0.0023	0.0137	0.0051	0.0378	0.0296	0.0353	0.0160	0.4323	0.0108	0.0624	0.0153	0.0074	0.0441
11. 식료 공업	0.0059	0.0326	0.0000	0.0018	0.0013	0.0032	0.0300	0.0032	0.0011	0.0097	0.0607	0.0129	0.0024	0.0005	0.1058

## &lt;계속&gt;

항 목	농 업	어 업	전력 공업	연료 채광	아금 공업	기계 금속	화학 섬유	건설 재료	임업 목재	경공업	식료 공업	기타 공업	건설업	수송 통신	상업 기타
12.기타 공업	0.0056	0.0217	0.0000	0.0214	0.0170	0.0260	0.0129	0.0187	0.0120	0.0040	0.0027	0.0376	0.0322	0.0015	0.0105
13.건설업	-	-	-	-	-	-	-	-	-	-	-	-	-	-	-
14.수송 통신	0.0051	0.0111	0.0322	0.0155	0.0436	0.0157	0.0199	0.0535	0.0127	0.0071	0.0146	0.0223	0.0395	0.0201	0.0124
15.상업 기타	0.0107	0.0354	0.0252	0.0122	0.0201	0.0210	0.0425	0.0008	0.0169	0.0259	0.0075	0.0218	0.0172	0.0356	0.0258
A. 소계 (1~15)	0.3675	0.3305	0.2963	0.4036	0.6383	0.6040	0.5634	0.5192	0.3968	0.6878	0.7257	0.6116	0.7261	0.2867	0.3806
16.감가 상각	0.0194	0.0676	0.1189	0.1447	0.0660	0.0504	0.0679	0.0681	0.0426	0.0221	0.0172	0.0386	0.0340	0.2000	0.0682
17.개입 수입	0.4598	0.4190	0.0363	0.2991	0.0700	0.1060	0.0407	0.1779	0.2987	0.0774	0.0327	0.1193	0.2056	0.2324	0.2243
18.사회 수입	0.1533	0.1828	0.5484	0.1526	0.2256	0.1202	0.3281	0.2348	0.2619	0.2127	0.2244	0.2304	0.0344	0.2809	0.3269
B. 소계 (17~18)	0.6131	0.6018	0.5848	0.4517	0.2957	0.3456	0.3687	0.4126	0.5606	0.2901	1.2571	0.3498	0.2400	0.5132	0.5512
총투입 (A+16+B)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통일원, 「북한경제의 종합평가」(각년도);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1990, (1991); <부록 4-1>, 중국통계출판사, 「진국투입산출표 1981」(북경: 국가계획위원회 경제예측중심, 1986);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투입산출표 1987」(북경: 국가통계국 국민경제평형통계사, 1991)을 근거로 작성.

<부록 4-3> 북한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항목	농업	어업	전력 공업	연료 채광	야금 공업	기계 금속	화학 섬유	건설 재료	임업 목재	경공업	식료 공업	기타 공업	건설업	수송 통신	상업 기타
1. 농업	1.2779	0.1502	0.0382	0.0660	0.0812	0.1064	0.1452	0.0933	0.0499	0.3537	0.8307	0.3607	0.2214	0.0348	0.1765
2. 어업	0.0002	1.0348	0.0003	0.0002	0.0004	0.0004	0.0006	0.0002	0.0002	0.0005	0.0038	0.0004	0.0004	0.0004	0.0070
3. 전력 공업	0.0186	0.0134	1.0198	0.0955	0.1329	0.0727	0.0766	0.1158	0.0310	0.0366	0.0165	0.0869	0.0648	0.0227	0.0232
4. 연료 채광	0.0137	0.0075	0.1382	1.0711	0.1037	0.0482	0.0472	0.1191	0.0205	0.0220	0.0115	0.0349	0.0515	0.0270	0.0140
5. 야금 공업	0.0251	0.0197	0.0347	0.0953	1.5188	0.3730	0.0491	0.1069	0.0565	0.0236	0.0151	0.0349	0.2090	0.0400	0.0278
6. 기계 금속	0.0318	0.0354	0.0000	0.1251	0.1298	1.2184	0.0455	0.1092	0.0678	0.0257	0.0210	0.0459	0.1864	0.0656	0.0615
7. 화학 섬유	0.1339	0.1144	0.0000	0.0938	0.1003	0.1826	1.4054	0.1462	0.1127	0.1489	0.1080	0.1964	0.1650	0.2058	0.1288
8. 건설 재료	0.0031	0.0056	0.0054	0.0208	0.0266	0.0173	0.0100	1.0533	0.0077	0.0045	0.0020	0.0125	0.2902	0.0056	0.0088

## &lt;계속&gt;

항 목	농 업	어 업	전 력 공업	연료 채광	야금 공업	기계 금속	화학 섬유	건설 재료	임업 목재	경공업	식품 공업	기타 공업	건설업	수송 통신	상업 기타
9. 임업 목재	0.0159	0.0207	0.0123	0.0632	0.0166	0.0334	0.0613	0.0217	1.2352	0.0289	0.0110	0.0438	0.0712	0.0144	0.0417
10. 경 공업	0.0957	0.0783	0.0235	0.0558	0.0485	0.1101	0.0920	0.0938	0.0553	1.7678	0.0326	0.1529	0.1070	0.0316	0.0989
11. 식품 공업	0.0153	0.0450	0.0068	0.0098	0.0122	0.0184	0.0522	0.0117	0.0090	0.0257	1.0727	0.0286	0.0172	0.0097	0.1243
12. 기타 공업	0.0114	0.0276	0.0071	0.0320	0.0359	0.0457	0.0245	0.0313	0.0197	0.0092	0.0087	1.0487	0.0531	0.0074	0.0184
13. 건설업	-	-	-	-	-	-	-	-	-	-	-	-	1.0000	-	-
14. 수송 통신	0.0136	0.0198	0.0423	0.0321	0.0818	0.0477	0.0397	0.0757	0.0251	0.0218	0.0243	0.0390	0.0756	1.0309	0.0239
15. 상업 기타	0.0231	0.0494	0.0397	0.0301	0.0500	0.0514	0.0713	0.0242	0.0340	0.0568	0.0043	0.0448	0.0473	0.0535	1.0395

출처: &lt;부록 4-2&gt;와 동일.

〈부록 4-4〉 북한의 산업연관표(중간수요 및 중간투입)

(단위: 백만 달러)

항 목	농업	어업	전력 공업	연료 채광	야금 공업	기계 금속	화학 섬유	건설 재료	임업 목재	경공업	식료 공업	기타 공업	건설업	수송 통신	상업 기타
1. 농업	862.126	36.063	1.835	7.523	36.255	81.402	36.246	33.224	2.721	243.838	670.059	199.221	379.270	4.044	129.469
2. 어업	-	16.578	-	-	-	-	-	-	-	-	3.655	-	-	-	-
3. 전력 공업	12.333	0.810	0.000	25.522	124.637	61.135	43.904	76.445	2.732	20.267	2.812	48.889	28.967	3.764	28.821
4. 연료 채광	12.612	0.197	16.451	16.126	83.271	24.092	20.245	78.109	1.366	8.839	2.338	7.952	12.141	9.064	11.112
5. 야금 공업	28.232	1.269	0.652	12.878	543.459	624.139	15.357	38.951	4.405	5.622	0.699	5.006	265.256	4.933	4.744
6. 기계 금속	70.306	8.577	3.185	28.940	92.568	423.565	15.829	54.114	7.782	6.803	4.699	12.698	329.467	20.990	129.746
7. 화학 섬유	261.965	27.458	9.031	10.829	28.863	234.111	281.249	56.057	10.985	59.333	4.791	67.792	134.349	74.582	196.164
8. 건설 재료	4.852	1.510	0.096	5.537	23.684	20.841	5.0638	42.337	0.854	2.126	0.408	6.611	578.334	0.971	19.747

## &lt;계속&gt;

항 목	농 업	어 업	진력 공업	연료 채광	야금 공업	기계 금속	화학 섬유	건설 재료	임업 목재	정공업	식료 공업	기타 공업	건설업	수송 통신	상업 기타
9. 임업 목재	22,996	6,108	0,037	16,326	2,336	38,507	38,275	4,656	43,944	20,217	2,576	19,795	136,958	2,846	73,403
10. 경 공업	183,691	16,163	0,299	5,003	8,682	113,866	31,486	33,238	3,535	761,868	11,619	50,485	45,914	4,068	148,868
11. 식료 공업	25,352	16,284	0,004	0,653	2,207	9,712	31,929	3,041	0,235	17,068	65,195	10,446	7,1634	0,257	356,927
12. 기타 공업	23,986	10,845	0,002	7,812	28,781	78,368	13,783	17,568	2,656	7,020	2,936	30,444	96,795	0,834	35,516
13. 건설업	-	-	-	-	-	-	-	-	-	-	-	-	-	-	-
14. 수송 통신	22,060	5,523	4,258	5,642	73,937	47,414	21,193	50,409	2,801	12,463	15,665	18,042	118,795	11,017	41,768
15. 상업 기타	45,757	17,659	3,334	4,441	34,054	63,398	45,277	0,778	3,740	45,731	8,086	17,653	51,705	19,458	87,181

출처: &lt;부록 4-1&gt;, &lt;부록 4-2&gt;, &lt;부록 4-3&gt;을 근거로 작성.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6.
- \_\_\_\_\_. 「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40호. 서울: 국토통일원, 1986.
- 금강산 국제그룹(북한). 「금강산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 1993.
- 길정우 외.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준한 외.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방안」. 서울: 산업연구원, 1992.
- 김태일·전상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北韓의 對南戰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남북회담사무국. 「남북 경제회담 핸드북」. 서울: 통일원, 1993.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한

- 현안레포트 95-2호.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5.8.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개정판)」.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나진·선봉 투자대상안내」. 평양: 1993.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연감 1993」. 북경: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1994.
- \_\_\_\_\_. 「해관통계」. 북경: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각호.
-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52호 (1995.10.1~10.31).
- \_\_\_\_\_.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각년판.
- \_\_\_\_\_. 「남북합의서」. 서울: 통일원, 1994.
- \_\_\_\_\_.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서울: 통일원, 1994.
- \_\_\_\_\_. 「북한의 합영사업추진실태」. 서울: 통일원, 1994.
- \_\_\_\_\_. 「통일백서 1992」. 서울: 통일원, 1992.
- 평양출판사. 「김정일지도자 제3부」. 평양: 평양출판사, 1994.
- 한국국제문화협회. 「남북대화」. 제1호.
- \_\_\_\_\_. 「남북대화」. 제28호(1982).
-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각년도.
- Jeffries, I.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s to the*

- Market: A Guide*. London: Routledge Publishing Company, 1993.
- Kornai, J. *Anti-Equilibrium*.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71.
- \_\_\_\_\_, *The Economics of Shortage*. Vol. 1, 2. New York: North Holland Publishing Co., 1980.
- Perry, E. J & C. Won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Causes, Content, and Consequenc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 Winiecki, Jan. *The Distorted World of Soviet-Type Economie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8.

## 2. 논문 및 기타

- 권 오. “남북한 경제교역 추이와 대응방안.” 한성대 광복50주년기념 통일문제세미나, 1995.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10.2).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주간판 제787호. 1992.3.19.; 주간판 제 804호. 1992.7.16.
- 배종렬. “접경 3국 개발계획간의 일관성 분석.” 김익수 편. 「두 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에 대한 분야별 평가」.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오승렬. “중국 경제개혁과 시장기구의 역할.” 「현대중국연구」. 제2집. 서울: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1994.
- 이동근. “세계의 발전추세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것은 21세기 변영하는 동북아세아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중국 심양, 요녕 사회과학원 주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지역 경제협력과 사회발전’에서 발표, 1995.8.17.
- 최병선.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의 현황.”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제동향 1994년도 상반기」. 1994.
- 최신립. “북한과 동북아경제권의 연계가능성.” 한국정치경제학회, 1995.
- Brody, A. “About investment cycles and their attenuation.” *Acta Oeconomica*. vol. 31, 1983.
- Seung-Yul Oh.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Is China’s Reform Model Relevant to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Seoul: RINU. 1993.

빈 면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에덴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 進展과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研究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

---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研究報告書 95-22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

---